

녹색성장 비판과 대안적 발전-토건 독재를 넘어서

- 장소: 환경연합 회화나무홀
- 일시: 2009년 9월 5일(토) 10:00 ~ 14:00

○ 날짜와 시간 프로그램

- 10:00 - 10:20 포럼 참가자 소개
- 10:20 - 11:20 발표
- 11:20 - 12:00 전체 토론 1
- 12:00 - 12:30 점심식사
- 12:30 - 14:00 전체 토론 2

○ 내용

- 토목독재의 녹색성장을 극복할 대안,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 생태적 근대화, 생태 사회주의 그리고 생태 아나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 시장과 자본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적 시장인가? 시장 개혁인가?
- 환경운동과 풀뿌리 대안운동이 '녹색 성장의 담론과 정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발표 자료

- 1. 녹색성장 비판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함의: 이상헌 교수 2
- 2.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경제,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로 본 대안 경제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 장원봉 박사 16
- 3. 생태맑시즘 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비판과 대안: 김민정 박사 26

○ 참고자료

- 전북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김정원 관장 32
- 자본주의와 환경경영: 김민정 박사 40
- 녹색, 전선을 넘어서-그린자본주의 시대의 에코·생명 담론: 주요섭 이사장 52

○ 전체 토론

- 사회: 구도완 박사
- 주제와 관련된 포럼 참가자
생태적 근대화 : 박진희
환경 경제 : 홍종호
사회적 경제 : 정규호, 유정길
지속가능발전 : 고철환

※ 작성중인 원고이니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함의

이상헌(한신대학교 교양과정 교수)

1. 들어가는 말

지난 2008년 8월 15일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하 ‘녹색성장전략’이라고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저탄소 사회 신성장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및 산업을 부각시켰으며, 에너지 자립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제고하겠다고 하였다. 즉,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2012년까지 년 10조원 규모)하여 현재의 에너지-경제-기후-생태계 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겠다는 장기적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와 실업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환경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추진하려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협약 논의과정에서 늘 애매모호한 태도로 국제시민환경단체의 비난을 받아온 한국이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체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린 뉴딜 정책’을 포함한 ‘녹색성장전략’은 아직 형성중인 전략이고는 해도 기후변화 대응이 갖는 패러다임적 전환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성장이라는 이슈’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의 부재, ‘저탄소’, ‘녹색’, ‘성장’ 개념들 사이의 충돌, 뉴딜에 대한 낡은 관념의 고수, 정책수단 실효성의 불충분한 담보, 전략 추진 수단들 간의 상충, 근거법률의 법리적 오류, 거버넌스나 의견수렴을 비롯한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 원자력 중심의 전원구성, 4대강 사업과 같은 반환경적 토건사업의 추진, (심야전기난방문제와 같이 시급한 사안을 제쳐두고) ‘그린홈’ 등과 같은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우선순위의 오류 등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도 다수 존재한다(이상헌, 2009; 윤순진, 2009; 조영탁, 2009; 함태성, 2009; 유종일, 2008).

그러나,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추진 사업들이 가진(혹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현상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좀 더 이론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녹색성장전략’을 검토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자연은 계속해서 자본의 축적 전략, 혹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메카니즘 안으로 (형식적, 실질적으로) 포섭되어 왔다. 따라서 ‘녹색성장전략’ 역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자연을 포섭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¹⁾. 이러한 접근은 ‘녹색성장전략’이 등장하게 된 맥락에 대한 역사적 이해이자, 정치경제학적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녹색성장전략’이 등장하게 된 구조적-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생태적- 배경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녹색성장전략’의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분석하는 일은 이 전략의 역사적인 위상을 드러내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향후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작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검토

1) 자연과 관련한 자본의 축적전략 그리고 자본에 의한 자연의 형식적, 실질적 포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술할 것이다.

1)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

-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 변화가 계속 있어왔음.
- 자연과 사회의 물질적 신진대사와 균열(“자연과 사회는 사회적 노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물질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변화시킨다”).
- 생산조건으로서의 자연과 2차 모순(성장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있음)
- 자연의 생산과 자본에 의한 포섭(“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한 확대재생산 - 잉여가치의 지속적인 창출과 실현을 통한 자본축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절대적인 양적, 질적 한계를 가진 자연은 자본축적을 규정하는 생산의 외적 조건이지만 생산 과정에 필요한 각종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본순환 과정에 포섭되면서 물질적으로 담론적으로 (재)생산된다”)
- 축적전략으로서의 자연과 환경적 조정(현재의 녹색성장 설명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 제공)
- 그러나,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 혹은 자연이 하나의 축적전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학은 자본의 상대적 잉여가치생산 메카니즘에 치중한 설명방식. 자연의 물질성에 대해 인정은 하고 있으나 이론의 핵심으로 끌어들이지는 않고 있음. 그 결과, “자본축적을 위한 전략으로서 자연의 통제와 활용이 궁극적으로 심각한 생태위기를 초래하고, 자본이 전략적으로 이러한 생태위기를 더 이상 통제하고 활용할 수 없을 때(즉 자본에 의한 환경적 조정이 더는 불가능할 때)대안적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자연의 물질성은 지속가능한 채로 남아있을 것인가? 환경적 조정이 불가능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2) 관류혁신(throughput innovation)과 생태경제학

- 관류혁신을 주장하는 생태경제학-성장없는 번영(prosperity without growth)을 주장하는 입장도 포함해서-의 입장은 이에 비해 자연의 물질성을 충분히 이론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분배나 소비 쪽에 치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전략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학적 설명과 생태경제학적 설명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대안제시에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 (성장에 대한 집착 --> 무책임성의 구조(structure of irresponsibility). 성장을 위해 신용을 창출. 부채에 기초한 신용....금융위기)

3.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린 뉴딜’에 대한 개략적 이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경제성장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이에 화답하기 위해 이 정부는 이른바 ‘747’공약이라고 하여 매년 7%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선포를 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대응종합 기본계획’(2008)의 수립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그러나 실제로 새롭다고 보기에 어려운 ‘성장’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및 산업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에너지 자립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제고하고, 2020년 3,000조원의 녹색기술시장을 선도하며,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린카(green car)를 육성하여 세계 4대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2).

우선 기존의 요소투입 성장모형과 달리 탄소저감정책과 친환경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면서도 환경오염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녹색성장 5대 비전은 아래의 <표 1>처럼 정리될 수 있다.

<표 1>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녹색성장 5대 비전(2008-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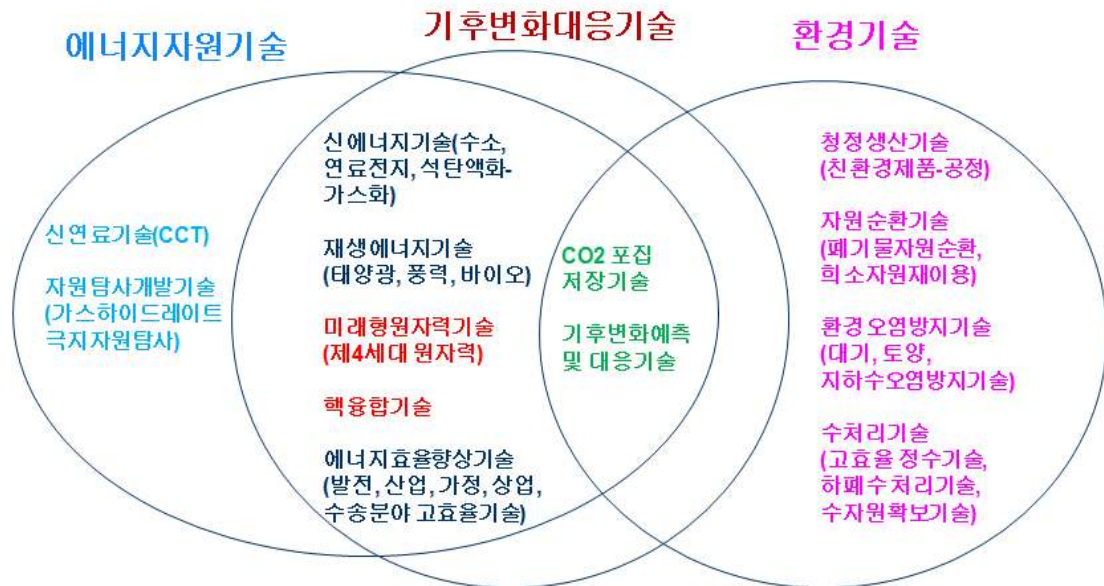
5대 비전	지표	2006년	2030년
에너지자립사회구현	차주개발율	3.2%	40%
	신·재생에너지보급률	2.2%	11%
에너지저소비사회로의 전환	에너지원단위	0.347	0.185
탈석유사회로의 전환	석유의존도	43.6	33%
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 구현	에너지빈곤증비율	7.8%	0%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	에너지기술수준	선진국대비 60%	세계최고수준

출처: 이창훈, 2008, “녹색성장전략과 녹색성장포럼 운영방안”

그런데, 주목할 것은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이 2030년에 11%로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로 늘리는 데는 약 1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에서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같은 년도에 보급률을 9%로 전망하였다. 한편, 설비투자 100조 원 중에서 72조 원을 민간투자자로, R&D 투자 11.5조원 중에서 민간투자가 4.2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녹색성장전략은 녹색기술에 대해 대단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기후친화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이 운전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연장인 핵융합기술도 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지원하고자 한다. 물론 이 외에도 자원탐사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기술, 청정생산기술 등 다른 기술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2) 녹색성장의 특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08,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이창훈, 2008, “녹색성장전략과 녹색성장포럼 운영방안”(지자체 녹색성장 워크숍 발표자료)를 인용하였다. 원자료에는 10가지 특징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부만 선택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1> 녹색성장전략에 의해 지원되는 녹색기술
출처: 이창훈, 2008, “녹색성장전략과 녹색성장포럼 운영방안”

녹색성장의 또 다른 특징은 일자리 창출전략이라는 점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고용효과가 기존의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태양에너지 이용분야는 약 7배-11배 정도가 높아서 독일의 경우 태양광 에너지에서 10만명, 덴마크는 풍력터빈에서 2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한다. 우리는 녹색성장을 통해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며, 우선 2012년까지 그린 사회적 기업 400개를 육성하여 약 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국토공간이용 측면에서 녹색성장은 저비용, 친환경 녹색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에너지 절약형 대중교통 활성화,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경관도로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통한 자전거 교통분담률(현재 1.2% 수준) 제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활용하는 그린홈, 그린빌딩도 확대될 것인데, 이를 통해 기존 에너지 소비량의 40-55%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생태기반 녹색성장도시 조성(컴팩트 도시, compact city) 및 국토공간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녹색성장전략에서는 소비자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에코라벨링, 기업환경정보 공시제도 등 제품 및 기업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소비자 주권의 실질적 실현 및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의 실천하는 생활문화(자전거타기, 에너지 및 물 절약 등)를 정착시키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녹색성장 개념을 반영하고 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문화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디어와 교육을 활용하여 녹색 문화(green culture)운동을 확산하는데, 생태문화교육 및 국립자연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노래보급 등 놀이와 배움을 접목한 체험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태문화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지를 관광자원화하겠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일본 녹색성장과 마찬가지로 환경친화적 세계 개편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하였다. 즉,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은 강화되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것을 통해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뉴딜은 애초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자하여 95.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토목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등 9개 핵심사업에 39.4조원을 투자하여 70.3만개의 일자리를, 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27개 연계사업에 10.7조원을 투입하여 25.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도건우 외, 2009). 이처럼 그린 뉴딜사업이 토목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단순노무직 위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향후 녹색산업의 성장에 따라 이들이 그린칼라³⁾(green collar)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그린 뉴딜이 제안되면서 녹색성장 전략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나왔던 ‘그린에너지 산업성장전략’에 포함되었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9개 분야에 5년간 3조의 예산을 투자해 2012년 10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그린 카 기술개발’에 1,936억원, ‘바이오에탄올의 자동차 영향평가 및 기술개발 사업’에 30억원을 제외하고는 누락되었다는 점이다(김은경, 2009).

4.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녹색성장 개념과 지속가능발전 개념

엄밀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2000년도에 발간된 영국의 보수적인 경제지 *Economist*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고 한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한편, 우리나라에 녹색성장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 지칭 하고, 이에 대한 장관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전략과 방법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널리 진작시키기 위해 ‘유엔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사회이사회’(UNESCAP)와 우리나라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Seoul Initiative for Green Growth Network)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녹색성장 개념은 환경 자체를 보호한다거나 사후처리방식(오염처리 등)에 주목하기 보다는 성장 방식을 녹색화하자는 것이다⁴⁾. 즉, 현재의 성장 방식은 생태적 수용가능성을 초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06년 현재 기초소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세계 빈곤 인구의 2/3가 거주하고 있고, 안전하지 않은 음용수를 먹는 사람이 6억 명 이상, 위생시설이 없는 인구가 19억명, 전기나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8억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빈곤한 지역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초 소요를 만족시키고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동시에 생태적 수용능력 자체도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다. 따라서 생태적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3) 그린칼라는 화이트칼라(사무직), 블루칼라(노무직)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의식화된’ 블루칼라를 의미한다.

4) 녹색성장개념에 대한 설명은 주로 정래권, 2007, “Green Growth & Eco-Efficiency: A Reg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Asia & Pacific”(제2차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정책포럼 자료집)의 발제문을 참조하였다.

핵심적인 개념은 ‘생태적 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적 효율성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즉, 자원을 적게 소모하면서도 부(wealth)나 가치는 더 많이 생산하는 방식⁵⁾) 동시에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방식은 시장 메카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적 비용을 시장가격에 내부화하고,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비동조화(decoupling), 즉,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환경세 혹은 환경친화적 세제개혁 등을 통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환경을 오염시키는)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⁶⁾

이처럼 2005년에 공식화된 녹색성장의 개념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실용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보다는 오히려 후퇴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의 세 가지 축인 경제(성장), 환경(보존), 사회(정의, 통합) 중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만을 추구할 뿐, 사회정의의 문제 혹은 환경피해의 계층적 집중 문제나 특정 지역적 집중 문제 같은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빠져있기 때문이다.⁷⁾

물론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전략적인 개념에 비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모호하다. 그러나 그러한 모호성 때문에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녹색성장은 민주주의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민주주의를 반드시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서 더 필요한 담론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후변화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적 성격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기존의 산업문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적 차이를 넘어서서 화석연료의 집약적인 사용방식에 근거한 산업 발전 양식, 경제성장 방식, 그리고 산업적 생활양식과 문화, 의식구조 전반에 걸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이대로 갈 경우 경제 성장의 토대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함의는 성장의 내용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 즉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녹색성장전략은 이러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반성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한 세기동안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한 여러 나라들은 미국을 기점으로 하는 ‘경제성장우선주의’(growthmanship)를 신봉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우선주의’라는 단어는 “모두가 경제 성장에 몰두했고, 그 결과 경제 성장이 서구 산업 세계 전역에서 정치적 의제와 공론을 지배하게 된 상황을 한 단어로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스페스, 2008: 177). 그러나 그 경제성장우선주의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화처럼 근사한 경제 성장을 눈 앞에 둔 21세기의 초입에서 우리는 끔찍한 사실에 직면하고

5) 그런데 생태적 효율성이라는 개념도 새로운 것은 아니며, 이미 널리 알려진 “팩터(Factor) 4”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폰 바이베커(Von Weizsäcker)와 로빈스(Lovins) 부부의 저서 제목에서 나온 “팩터 4”라는 개념은 자원사용을 반으로 줄이면서도 경제적 복지는 두 배가 되게 하면 자원효율성이 네 배로 개선되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

6) 주로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환경친화적인 세제 도입으로 GDP는 평균 0.5% 상승되고 온실가스는 평균 2-6%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örres, 2007)

7) 이미, 2005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故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존의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선언을 선포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각 부처가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이행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다.

있다. 서구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었다. 평균 실질소득이 몇 배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의 삶의 만족도는 이전에 비해 더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라면 우리는 실패했다...(중략)...현대 사회에서 성장의 역할을 분석하면 할수록 성장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물신숭배처럼 보인다. 마법의 힘을 지녔다며 생명도 없는 물체를 경배하는 것이다”(스페스, 2008: 171).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과 만족이지 성장이 아니다. 성장은 행복과 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만일 이 수단이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수단을 바꾸거나 버려야 한다. 우리의 경우 절대빈곤으로 고생하던 60-70년대에는 성장 자체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했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주는 방편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해온 결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불만족이 늘어나고 있다면 성장이라는 수단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한 경제성장 방법은 수출중심의 경제운용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내수가 튼튼한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없다. 최근의 미국발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은 우리가 대외적인 변수에 너무나 쉽게 휘둘릴 수 밖에 없는 허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운용 방식이 앞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점검해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중심적인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내다 팔 수 있는 아이템만 바꾸겠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현실 진단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그린 뉴딜 사업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이라든가, 고속철도 사업 등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적 개발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목공사에 필수적인 자재들이 철근, 시멘트 등과 같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품목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저탄소라는 표어에도 어울리지 않고, 성장에 대한 성찰에서도 동떨어진 것이다.

성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미흡한 점은 공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데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저탄소사회, 저탄소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물류와 운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녹색성장 전략은 수송 연료를 친환경적인 연료로 대체하려는 고려나 탄소중립도시 구축 등의 계획만 있을 뿐 온실가스를 적게 유발하는 국토공간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중앙집중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국적 물류와 운송 시스템은 이미 그 자체로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공간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적인 운송 및 물류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즉, 에너지, 물, 식량 등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이며,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물론,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펴낸 『녹색성장의 길』에 보면 분산형 전원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중앙집중적 전원시스템인 원자력 발전을 더 확대하려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기도 하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⁸⁾. 다시말해서 현재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원만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계속 성장을 하겠다는 것일 뿐,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동반하는 녹색전환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3) 상충되는 정책기조와 불분명한 책임주체

녹색성장 전략은 그동안 정부가 지향하던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분명히 MB정부는 신자

8)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 펴낸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2008)에 지역음식(local food)운동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국토공간구조를 재편하고, 마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자체는 부족하다.

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는 경제운명을 지지하는 정부인데, 녹색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강력한 정부개입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책 추진 과정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이미 언급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0년까지 11%, 2050년까지 20%)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설비투자 100조원, 연구개발(R&D) 투자 11.5조원인데, 이 가운데서 민간 재원투자가 각각 72조원과 4.2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거의 민간 재원투자에 의존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기업이 과연 이런 투자를 할 능력과 의지가 있을까? 최근 경제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아직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꺼릴 경우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정부가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어렵다.

기금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금 운영 실적은 매우 형편없다. 특히 국민연금의 운영실적은 거의 무사안일 수준으로 채권에만 매달려서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수준인데(정광모, 2008), 과연 기금 운영을 잘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사실 의심스럽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⁹⁾도 정부의 예산 고갈을 이유로 의무할당제¹⁰⁾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에너지관련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할까?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안에는 기후변화대응을 구실로 그럴 듯 해 보이는 내용은 일단 모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거의 전 부처에서 모두 녹색성장 정책을 내놓는데, 그러다보니 사업 주체들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전체적으로 이 전략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주체가 어디인지가 모호하다. 특히 기후변화대책 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사업이나 정책들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현재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2009년 2월에 입법예고 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주관할 주관부서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누가 될 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며 향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 내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배출량 보고, 온실가스 통계작성, 배출권 거래제 운영, 국가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기후변화대책의 핵심업무를 어느 부서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법률안에는 막연하게 ‘정부’라고만 되어 정리가 안된 채로 남아 있다. 그냥 각 부처별로 알아서 잘 하거나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잘 실천하면 되는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도 강준만 교수가 “각개약진 공화국”이라고 이름붙였던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강준만, 2008). 이러한 사정을 두고, 보수적인 프랑스의 지식인 기 소르망은 “한국 정부가 5년 동안 99조원을 투자할 22개 신성장분야를 확정·발표했는데 이는 경제와 샤머니즘(무속신앙)의 중간쯤 되는 것”이라고 냉소적인 평가를 내린바가 있다¹¹⁾.

9)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이며,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11개의 에너지원 중 태양광, 풍력, 소수력, 조력, LFG, 폐기물 발전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의무구매해준다. 제도 제정 당시는 국내실적자료 미비로 인하여 태양광은 독일기준 가격의 120%(도입비용, A/S 비용 감안)로 하여 716.40원/kWh(당시 독일가격 597원/kWh)으로 고시하였고, 태양광 이외의 기타전원(풍력, 소수력, LFG, 폐기물)은 이용율을 고려하여 중유발전 회피비용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조력의 경우는 시화호조력을 모델로 원가분석을 통하여 2004년 고시가격을 결정하였다.(www.naver.com 참조)

10) 주요 발전사업자들에게 일정비율 이상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의무할당제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장참여를 떨어뜨리고 정책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www.naver.com 참조),

11) 2008년 9월 23일,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의 강연 내용 중 일부 (<http://blog.naver.com/naulboo?Redirect=Log&logNo=70035293998>). 그 이후에 녹색성장관련 투자금액이나 내용 등에 수정이 가해져서 정확한 수치를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녹색성장전략이 경제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녹색성장전략이 현재의 성장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 실제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정확하게 원인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그린 뉴딜은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부양정책은 과거 미국의 뉴딜 정책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제시된 공공사업들(4대강 정비사업, 고속철도 조기완공 사업 등)은 환경파괴적 요소가 많아서 녹색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안했던 뉴딜의 핵심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라 총체적인 경제사회 개혁이었다.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이 강조하듯이 뉴딜정책은 ‘대압착’(Great Compression) -부유층과 빈민층 사이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규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을 통해 시장경제의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안정시키고 중산층 중심의 경제를 형성하려는 시도였다(Krugman, 2007). 여기에는 금융통화개혁(금본위제 철폐, 중앙은행의 최후대부자 기능강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기업개혁(불공정 경쟁 제거), 사회보장정책(실업부조), 노동개혁(단체교섭권 보장, 최저임금 규제, 아동노동금지)등이 포함되었다(유종일, 2009). 뉴딜 정책에서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은 일부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MB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이름은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4대강이 아니라 건축업을 하는 대기업만 살리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 추진 근거 자체가 박약하다. 이미 국토해양부 발표로도 4대강의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악화되어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정책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퇴적물 때문에 하천바닥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감사원 자료를 보면 4대강 전역에서 퇴적보다는 세굴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홍현호, 2009). 심지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낸 여당 국회의원 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 “100% 국가 부채로 사업을 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재해·재난방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경제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하든가, 차체에 주변까지 다 개발해 리조트나 만들어본다는 식으로 자꾸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2009. 6.12).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이 (근본적인 성찰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발전 여건과 기후변화대응에 따르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학력 근로자의 질적 저하 경향이 뚜렷하고 비제조업 부문에서 선진국과의 생산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저학력 위주의 단순한 일자리 창출로 향후 지식기반경제에 의한 경제성장은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한진희, 김재훈,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린뉴딜은 단순노무자 위주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위주로 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효율적 감축 방법 및 감축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기후변화협약에는 근본적인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즉,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생산활동을 거의 중단해야할 정도로 큰 비용이 들지만 정작 지구적 차원에서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어느 정도까지 위험부담을 하고자 할까? 선진국 이외의 개도국에도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부과될 경우 이러한 위험을 감수

하기 어려워 협약을 탈퇴하여 협약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한진희, 김재훈, 2008).

온실가스 감축수단 관련해서도 배출세와 배출권거래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며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한진희, 김재훈, 2008). 기업들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 나와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감축체제(reduction system)를 갖출지에 대해서 장기간의 심도 있는 연구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한데, 현재는 너무 급작스럽게 서두르고 있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감축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질지 의문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보이지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계획도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환경세로서 탄소세를 부과하고자 하지만,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의 연간 총 보조금 규모를 보면 환경유해보조금이 연간 약 4조 8,697억원이며, 환경친화적인 보조금은 연간 약 4,208억원에 달한다(강만옥 등, 2007). 즉, 에너지 관련된 지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유해한 부문에 돈을 더 쓴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세계개혁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석유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에 제대로 돈을 쓰자 하려면 무엇보다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예산구조를 바꿔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자동차 도로 확충 및 개선과 관련된 예산(계획된 예산 포함)을 최근 몇 년간 집계해보면 대략 105조 3454억원 정도에 달한다¹²⁾.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속도로(2000년-2005년)에 25조 1070억원, 국도확장(1998년-2005년)에 28조 6937억원, 국도대체우회사업(2000년-2006)에 19조 7447억원, 지방도로사업(2007년-2026년)에 25조원,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2006년부터)에 6조 8000억원이 사용되었거나 계획되었다. 반면 자전거 관련 예산은 1998년에서 2006년까지 총 약 4745억원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5년도에는 GDP의 4.4%에 달했는데, 이는 일본 0.79%, 미국 0.65%, 영국 1.25%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려면 세출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녹색재정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 없다.

5) 원자력이 적절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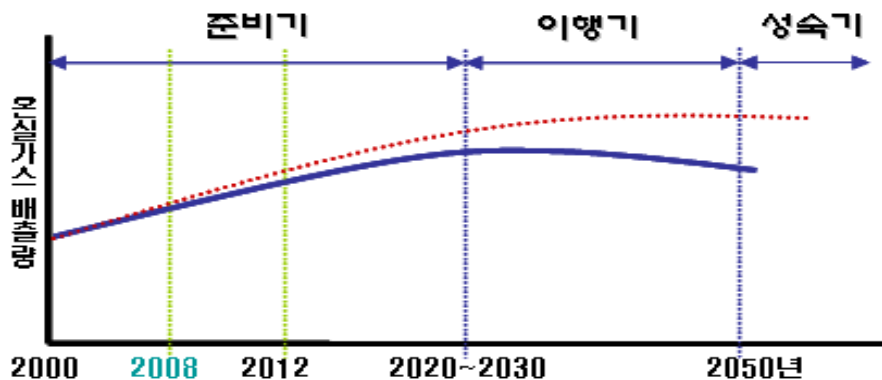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에 적절하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 듯해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독일의 생태연구소의 1990년 연구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폐기라는 전(全)과정을 고려하면 1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54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만, 오히려 열병합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열효율이 80%가 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가정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면 석유와 석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¹³⁾

그리고 석유 고갈에 의한 에너지 위기를 원자력이 모두 해결해줄 수도 없다. 현재 원자력은 발전부문에 주로 사용되는데, 발전부문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5%밖에 되지 않으며, 원자력 비중을 늘려도 실제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를 2006년 43.4%에서 2030년까지 33%로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2006년 2.4%

12) 이 금액은 필자가 정광모(2008)의 책에서 나온 수치를 합산한 금액이며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 건설 규모의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합산한 것이다.

13) 이필렬, “원자력발전과 에너지대안”(www.kojiwon.com/612)

에서 2030년 11%로 증가시키고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15.9%에서 27.8%로 늘인다는 것이 탈화석에너지화의 내용이다. 그런데 석유소비량을 계산해보면 '06년도의 전체 수요량 233.4백만TOE의 43.6%는 101.8백만TOE이고, 2020년 총수요 287.6백만TOE의 36.2%는 104.2백만TOE이며, 2030년 총수요 300.4백만TOE의 33%는 99.1백만TOE로 2020년까지의 실제 소비량은 '06년에 비해 증가하고 2030년에 가서야 '06년 대비 2%인 2.7백만TOE 감소하는데 그친다. 이러한 추세는 석탄의 경우도 같아서 '06년의 석탄 수요가 56.7백만TOE이고 2020년에 66.8백만TOE로 증가했다가 2030년에 가서 47.2백만TOE로 감소한다(김은경, 2009). 결국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원자력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기후변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래의 <그림 2>이다. 이 그림은 2008년에 발표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 장기 전망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 결과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다(김은경, 2009).



<그림 2> 이산화탄소 배출 장기 전망

※준비기(배출량 둔화), 이행기(온실가스감축가속화),성숙기(저탄소사회)

출처: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원자력발전은 무엇보다도 방사성폐기물 문제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무려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홍역을 치렀던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는 사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였다. 가장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지 40년이 더 넘는 이 시점까지도 전세계 어떤 나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미국은 아직 처분장소를 확실하게 찾지 못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은 재처리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액체 폐기물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보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후보지 몇 곳을 선정하여 지질조사를 해왔지만 지층의 안정성과 관련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아직도 처분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다는 스웨덴도 사용후 핵연료는 임시저장소에서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처분장은 2020년 경에나 완성될 예정이라고 한다¹⁵⁾. 우리나라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이나 입지를 결정하는데도 19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심한 진통을 겪었는데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인가? 혹은 얼마나 큰 인센티브를 주고서 입지를 결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어떻게 디자인되고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더 확대

14) 황당한 것은 원자력발전 초기에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었으며 막연히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해야 할 시점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륙은 했는데, 착륙할 곳이 없이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와 같은 신세라고 할 수 있다.

15) 이필렬, 앞의 글

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크게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¹⁶⁾.

원자력발전이 경제적이라고 하는 주장도 엄밀히 따지면 근거가 부족하다. 원자력발전이 경제성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건설비용이나 폐기비용을 보조할 경우에만 적합한 이야기이다.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도 상업적 측면에서 경제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영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민간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입을 꺼리는 바람에 무산되었고, 원자력발전이 전력의 70%를 공급하는 프랑스의 경우 국영프랑스전력공사는 약 350억달러(약 50조원)나 되는 부채에 시달리면서 정부의 보조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¹⁷⁾.

현재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추가로 1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송배전망 건설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28조원이 든다. 그리고 새롭게 발전소 입지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지역에 증설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특정지역에 발전소가 몰려있어서 초고압송전선(765V)을 통해 대규모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초고압송전선은 기존 송배전망 건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비용 포함시 35조원 정도 예상) 요구될 것이며 건설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의하면 원전에 의한 발전비중이 발전량기준으로 59%에 달하게 된다. 정부에서도 원전확대가 당분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입지선정이나 공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5년 정도가 소요될 텐데, 그때의 발전시장에도 이러한 특정 전원에 대한 의존이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16) 최근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처리를 금지해놓은 한-미원자력협정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외교적 압박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17) 이필렬, 앞의 글

5. 결론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정책은 기후변화대응이라는 타당하고도 적실한 과제를 떠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나 추진방식을 보면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래된 부문’(old sector)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녹색전환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전히 경제성장우선주의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체제를 움직이는 동력만 바꾸고 취약한 체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녹색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드웨어 중심의 대규모 토건사업을 하겠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원자력발전을 오히려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지향을 가진 정부가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려는 정책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모순적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단히 기술지향적인 해결책들을 우선순위로 불분명한 채로 한꺼번에, 사회적 합의도 없이 쏟아내었으며,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계획도 불투명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의 내용도 다른 기본법들(에너지기본법, 지소가능발전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법리상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거나,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기본법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구성이라는 비판도 있다(함태성, 2009).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한 국가의 60년 장기 비전으로 수립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너무 급하게,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나 차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속도전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라는 주제는 기존의 발전방식, 혹은 성장방식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장 프로그램들을 바꾸고 에너지를 교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물론 에너지를 교체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더 나아가서 사회 모든 부문, 그리고 일반인들의 생활양식, 문화규범, 의식구조까지도 바뀌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녹색성장보다는 녹색전환이다. 녹색전환을 이루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집권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이렇게 심각한 경제위기를 목전에 두고서 세금이 엄청나게 사용되는 정책들이 추진되는데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이 없어서는 곤란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이 각각 얼마씩 더 부담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리고 그래도 동의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을 우리는 ‘녹색전환을 위한 생태민주주의’ 기획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만옥 등, 2007, “에너지, 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1)”, KEI정책보고서
- 강준만, 2008, 『각개약진 공화국-대한민국, 그 치열하고 전투적인 생존경쟁의 비밀』, 인물과 사상사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 김은경, 2009, “지속가능발전: 진보진영의 새로운 담론”,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진보대안담론세미나 자료집」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08,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슬라이드 발표자료)
- 도건우, 이지훈, 신창목, 2009,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691호 (2009.2.11)
- 유종일, 2009, “MB정부의 ‘녹색 New Deal’ 비판과 대안”, 한국환경회의, 「녹색없는 MB식‘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 자료집
- 이상헌, 2008, “‘저탄소 녹색성장’의 특징과 문제점”, (사)환경과 생명, 『환경과 생명』 2008년 겨울, 통권 58호
- 이창훈, 2008, “녹색성장전략과 녹색성장포럼 운영방안”(지자체 녹색성장 워크숍 발표자료)
- 이필렬, “원자력발전과 에너지대안”(www.kojiwon.com/612)

- 정광모, 2008,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시대의 창
- 정래권, 2007, "Green Growth & Eco-Efficiency: A Reg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Asia & Pacific"(제2차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정책포럼 자료집)
-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 지음, 이경아 옮김, 2008, 『미래를 위한 경제학-자본주의를 넘어선 상상』, 모티브북
- 함태성, 2009, "녹색성장기본법의 법률적 해석과 모순", 한국환경회의, 「녹색없는 MB식'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 자료집
- 홍현호, 2009,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Pressian」 (2009.4.30)
- Christoff, P., 1996, "Ecological Modernisation, Ecological Modernities", *Ecological Politics*, Vol. 5, No. 3, pp.476-550
- Görres, A., 2007, "Taming the bull: How Europe became the climate leader"(제2차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 정책포럼 자료집)
- Krugman, P., 2007, *The Conscience of a Liberal*, New York & London: W.W. Norton & Co. 『경향신문』 (2009.6.12)

<http://blog.naver.com/naulboo?Redirect=Log&logNo=70035293998>
www.naver.com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장 원 봉(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사회투자지원재단)

I. 왜 사회적 경제를 말하는가?

-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이는 시장제일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경제적 대안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전망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시민사회 영역(비영리단체)이 시장화의 제도적 동형화로 경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회적 기업의 논의의 지평을 사회적 경제의 관점으로 확장해나가면서 대안적인 경제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하는 지향이 담겨져 있음.
- 또한 기존 생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사회·경제적 정당성과 대안의 전략을 사회적 경제의 논의 속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들에서 비롯되기도 함.
-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인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며, 개념적인 혼란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형태 및 특성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상징화시키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함.
- 따라서 한국적 현실에서 대안적인 경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포괄적인 개념 체계를 가진 보편적인 개념화 작업이 요구됨. 이 작업은 단순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마련하는 것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임.

II.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정립을 위한 쟁점

□ 기존 사회적 경제의 개념적 접근

- 조직형태 및 법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 사회적 경제를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영역”으로 규정. 사회적 경제를 특정한 조직의 법적 형태 혹은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으로 제3섹터나 비영리부문 등의 개념 접근과의 혼선이 존재함.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이 양자로부터 배타적인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아니며, 양자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려 없는 그것에 대한 개념화는 가능하지 않음.
- 규범적 운영원리에 기초한 접근: “사회적 경제는 주요하게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 의해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조직들이 지닌 원칙들은 ①이윤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집합적 이해를 위한 목적, ②독립적인 경영, ③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④이윤의 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우선권 등임.”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들로 하여금 규범적인 정당성을 부여해기는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조직의 운영원리로 협소화하는 한계를 가짐.

-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시민사회부문이 아니라, ① 다양한 동원자원들과 원칙들에 기초한 복합경제(plural economy), ② 민간부문, 정부, 가정경제 사이에 매개적인 공간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위치 짓게 하는 사회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social welfare), ③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비공식적 가정경제와 구분되지만 이들과 교차되는 제3섹터 등으로 정의됨.” 사회적 경제를 좀 더 유연한 매개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복합경제의 접근이 현실적인 경제구조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선 각 주체들 간의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경제의 복합구조의 전망을 언급하고 있지 못함.

□ 사회적 경제 개념화를 위한 쟁점들

-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와 관련해 각각의 접근들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은 주체설정의 문제,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대안적 조절메커니즘의 타당성 문제로 요약됨. 이 쟁점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실천 활동에 기초해서 통합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경제의 주체설정: 이는 자신들의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격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비자로서 시장에 등장하고, 공권력에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로서 정치에 등장하는 소극적인 시민의 주체적 등장을 전제함. 따라서 시민집단의 주도성과 이를 지속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원리의 개발로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조직 원리는 다양할 것이며, 기존의 조직형태로서 협동조합, 공제조합, 연합체, 재단 이외에도 다양한 조직의 형태와 운영원리가 가능할 것임.

※ 마포두레생협, “우리가 잘하는 것은 조합을 만드는 일이다”

※ ICOOP 생협, “조합원의 91.1%가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위해 조합원에 가입함”

- 사회적 경제의 정당성 문제: 사회적 경제의 정당성은 그것의 존재가치의 실증에서 비롯되며,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보의 비대칭성,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민사회의 주도성에 대한 필요로서 인정받아야 함.

※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일상생활에 적응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역화폐에서도 마찬가지더라. 워커즈컬렉티브 등의 이니셔티브가 없는 취약계층의 지역화폐 사용은 힘들”

※ 마포두레생협,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다는 개념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유지되는 것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함. 또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곳의 수익에 만족하는 사람이 생기더라. 유지가 어려울 때는 지역차원에서 논의함. ‘필요해? 안 필요해?’ 에 대해서 계속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살리기 위해 노력함”

※ 의료생협연대, “그동안 의료생협은 의료시장 상황이 취약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의료기관의 권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생협이 제안되기도 함”

-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조절메커니즘에 대한 타당성 문제: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사회의 주도성이 지속적인 이윤의 추구하고 권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집단과 정치집단으로부터 어떻게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이끌어 낼 것인가?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복합경제, 그 자체로 대안적인 경제조절메커니즘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 대전민들레생협, “지역화폐가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관계’의 회복임.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들어와야 관계가 형성됨. 지역화폐의 필요는 어렵지만, 경제의 민주화라는 개념에 동의함”
- ※ 두레생협연합회, “협동조합운동은 경제운동조직임. 그것은 조합원 구성원들의 경제적 활동결과를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함. 협동조합은 내부자 연대에 기초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외부자 연대를 함께 가져가야 함”
- ※ 불교생협연합회, “복지국가의 확장과 축소에 대한 변수로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혹은 복지국가의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를 고려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함.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서 구축되어 가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대안적 구축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 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 사회적 경제 개념화의 방향과 범주

-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를 결속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혁신임. 이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는 ①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②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③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Ⅲ. 사회적 경제의 변천 과정: 보편성과 특수성

□ 한국 사회적 경제의 전통과 역사적 변화 과정

1) 1945년 해방 이전

- 한국 사회적 경제의 기원을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의 공동체적 관계망들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의 등장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으로부터 기원한다고 할 수 있음.
- 그 당시 협동조합에 대한 이상은 계급 운동적 지향, 민족주의 경향, 그리고 실용주의적 지향 등의 세 가지 경향이 있었음. 첫째, 노동자계급이 경제조직에 건설을 통한 자본가의 무리한 횡포에 대응하는 것(咸尙勳, 1931년 3월: 20; 김경일, 1992: 417-426). 둘째, 자본주의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횡포로부터 조선의 경제를 구해내는 것(咸尙勳, 1933; 장중익, 재인용; 韓昇寅, 1932: 31-36). 셋째, 자립적인 소비자조합과 생산조합의 조직을 통해서 민중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李光洙, 1932: 13-15).

- 1920년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 경성소비조합(京城消費組合)과 목포소비조합(木浦消費組合)이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으로 설립됨. 그리고 동경유학생 중심의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 천도교의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 그리고 기독교 YMCA의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이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협동조합운동이 확산됨. 하지만 일제는 이러한 민간협동조합운동의 확산이 독립운동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해서 이들을 사회주의운동으로 규정하고 집요하게 탄압하였으며, 결국 1933년에 이르러 이들을 강제 해산시킴(장종익: 2-4). 이러한 민간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그 당시의 평가는 그것이 일반 무산대중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점점 몰락해 가는 중소자본가계급을 그 정치경제적 토대로 삼은 것으로 자유경쟁이라는 자본주의원칙 하에서 결국은 와해가 불가피한 한계를 가진 운동으로 폄하되기도 함(柳海松, 1933년 1월: 32-33).

2) 1945년 해방 이후

- 1945년 해방 후에 좌우익의 농민조직들이 농업협동조합을 각자 구성하였으나, 정부는 농업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위해서 1958년 3월에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발족하면서 농업조합과 농업은행을 병립하도록 하고 농업조합은 신용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집권당의 정치도구로 활용하였음.
- 이러한 경향은 5.16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에서 보다 뚜렷하게 전개되었음. 군사정권은 1961년 8월 15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농협법을 제정하면서 이 둘을 통합한 종합농협을 발족시켰음. 즉 종합농협이 구매, 판매, 이용, 가공과 같은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을 겸하게 하였음. 그리고 농협의 주요 경영 관리층에 대한 인사를 정부로 하여금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상업적인 농업지원 서비스를 농협에게 맡기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농협의 공사화가 진행되었음. 이러한 상황은 자발적인 협동조합운동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음(장종익: 7-12).
- 한편 196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관제화되어 가는 농업협동조합과는 별도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신용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음. 1960년 5월 1일에 부산피난민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메리가별 수녀를 중심으로 캐나다 코디연구소와 세계신용협동조합협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성가신용협동조합’이 한국에서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음. 이후에 메리가별 수녀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교도봉사회’와 서울에 만들어진 ‘가톨릭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개의 신용협동조합들이 건설되었음. 1963년에 이러한 활동이 ‘협동교육연구원’으로 전환되고 1964년에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면서 신용협동조합운동의 기틀이 잡혀갔음. 1972년 8월에 신용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1973년에 277개 조합대표들을 통해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특별법인인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되었음. 하지만 이후에 신용협동조합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새마을금고와의 경쟁과 법률에 의한 정부의 감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장종익: 12-14).
- 그럼에도 이러한 신용협동조합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1983년에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 창립되었음. 그리고 1988년 한살림 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이 창립되고 여성 민우회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여러 개의 생활협동조합들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음. 그리고 1994년에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이 통합하면서 유기농산물직거래, 공동구매를 포함해서 보육, 의료, 보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협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이러한 활동은 1999년 8월부터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이러한 법률을 통해서

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 생산자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공사업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노동자협동조합은 7~80년대를 거치면서 주변적인 위치를 면하지 못하였음. 1970년대 초반 수도권특수선교위원회의 빈민선교와 1970년 중반에 진행된 산업선교의 일환으로 전개된 신용협동조합운동과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시도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노동자협동조합의 흐름을 발견할 수 없음. 그나마 이러한 활동들도 1980년대에 강력하게 한국의 사회운동을 지배하였던 마르크스주의적인 인식의 전통에서 개량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주목받지 못하였음. 하지만 1990년대 초반에 빈민운동진영을 중심으로 진행된 건설, 봉제 업종의 생산공동체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다시 등장하였음. 이러한 생산공동체운동은 1992년 하월곡동의 ‘건축일꾼 두레’ 를 시작으로 해서, 1993년 상계동의 봉제협동조합 ‘실과 바늘’, 인천 송림동의 전자제품조립 공동체 ‘협성’, 1994년 봉천동의 ‘나섬건설’, 인천의 봉제협동조합 ‘옷누리’, 1995년 구로의 봉제협동조합 ‘한백’, 마포의 ‘마포건설’, 행당동의 봉제협동조합 ‘논골’ 로 이어졌음(김홍일, 2002: 3).
- 이러한 움직임은 1992년에 설립된 ‘노동자협동경영연구회’ 를 전신으로 한 ‘협동조합연구소’ 의 이론 작업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자극을 받게 되었음. 특히 1992년 8월에 발간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라는 책의 번역출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페인 몬드라곤의 경험을 동경하게 하였으며,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이들은 생산 공동체운동 진영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론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시기에는 노동운동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운동에 대한 지원과 1998년부터 경제 불황으로 도산하는 기업들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인수하는 과정과 이후 경영과정을 지원하는 노동자기업인수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음.
- 하지만 그 당시 생산 공동체운동은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우선 초기 자본의 부족은 봉제업이나 건설업 등의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한계를 가지게 하였으며, 경영의 미흡이나 숙련기술의 부족은 시장경쟁력에서도 뒤쳐지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음. 특히 법적인 지위의 부재는 초기의 생산 공동체들의 설립을 어렵게 하였음.
- 이러한 노력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됨. 그래서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를 통해서 구체적인 빈민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가 제안되었으며, 1995년 김영삼 정부의 ‘국민복지 기확단’ 에서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자협동조합 방식이 검토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서 자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시범사업이 실시됨(송경용,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28).
- 이것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활동이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1996년 5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온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됨. 당시 자활지원센터들은 적지만 상근 활동가들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생업자금유자를 통해서 초기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받게 되었음(김홍일, 2002: 4).

3) 1997년 외환위기 이후

-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의 상황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됨. 대규모의 실업이 양산되면서 전국 각지에 실업극복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게 됨. 이들은 실업극복을 위한 국민성금으로 구성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¹⁸⁾’ 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18)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1997년 말엽에 IMF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업상황에 대응해서 시민

실직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취업알선 그리고 각종 상담사업 등을 전개하였음. 한편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를 근거로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됨(김미곤, 1999: 5-6).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생산성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야,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사회단체에게 민간위탁 되었음(장원봉, 2000: 41).

- 대부분의 민간실업극복단체들은 이러한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해서 무료간병사업, 음식물재활용사업, 빈곤가정집수리사업, 재활용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이후에 민간실업극복단체들은 실업자들의 한시적인 참여기간의 제한과 사업비 책정의 제한 그리고 불투명한 사업 지속성 등의 문제를 가진 공공근로사업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인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될 것을 요구하였음. 이러한 상황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통한 새로운 복지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
- ‘생산적 복지’라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는 나후되어 있는 복지 분야의 발전과 실업의 증가라는 고용창출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복지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근로연계 방안을 필요로 하였음. 이러한 필요는 정부로 하여금 유럽의 복지후퇴이후에 추진되어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 추진과 근로연계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도입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자활사업 영역을 동원하도록 하였음. 실제로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를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 현재 전국에 242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한편 노동부의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요구로 인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실업자들의 한시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그리고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의 마련이라는 고려 속에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전망을 사회적 기업에서 찾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현실화 됨.

□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

-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과정은 유럽의 상황과는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음. 한국 사회적 경제는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형태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유럽의 역사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 하지만 그 이후 한국 사회적 경제의 변화는 복지국가의 등장을 배경으로 역사적 변화를 보여 왔던 유럽의 경험과는 다르게 권위주의적인 국가통제에 의해서 그것의 왜곡과 단절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이 과정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강제 해산하거나 정부의 통제 안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음. 이러한 억압적 국가통제주의에 맞선 사회운동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사회적 경제는 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음.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빈민운동진영이 민주적인 경제공동체를 통해서 빈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 실천한 생산 공동체운동은 그동안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겪어온 억압과 단절의 역사를 재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사회의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해서 만들어진 민간단체이며 모금된 국민들의 실업극복성금을 통해서 실업극복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후에 2003년 6월에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

- 그리고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생산 공동체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고, 정부의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의 수립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신용협동조합활동가들과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운동이 전개되면서 형성된 생활협동조합운동도 한국 사회의 사회적 경제가 재생되고 있는 주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음.
- 유럽과 한국의 사회적 경제 상황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현상은 고용구조의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에 기인한다는 점임. 기존 전통적인 복지모델로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복지혼합(welfare mix)’ 과 ‘노동통합(work integration)’ 이라는 정책구상으로 유럽차원에서 수립되어 갔음. 사회의 복지수요의 대응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기능적 동등체로 시장과 시민사회를 인정한다는 복지혼합의 전제 속에서 다양한 복지다원주의가 추진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노동통합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이 같은 복지혼합과 노동통합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의 필요는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음(Evers, 1995; Evers & Laville, 2004; 장원봉, 2006).
-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유럽의 사회적 경제가 복지국가의 퇴조에 맞추어 그것의 대응방안으로 다시 새롭게 사회적 유인력을 가지게 되었던 반면에,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사회복지가 본격적인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시기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점임. 이 점은 사회적 경제가 놓인 사회적 환경의 차원에서 많은 서로간의 차이를 드러내게 하는 요인이 됨.
- 즉 이미 유럽은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체계가 정착된 이후에 그것의 변화와 발전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순서가 다른 것임. 결국 한국의 사회적 경제 상황은 유럽의 상황과 비교할 경우, 그것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가 미비한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임. 이것이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적 경제의 많은 자원이 정부부문이나 사회보장체계에서 조달되고 있는 유럽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미흡한 사회보장체계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초기에 유럽의 사회적 경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이 공공근로나 혹은 취로사업 같은 비공식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보호체계를 갖춘 공식부문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상황이 초기에 비공식부문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면서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심스러움.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현 정부가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

IV.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매개체

□ 사회적 경제의 유형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다양한 조직 유형을 보임. 이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광범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집단에 의해 유형화됨.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재단·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한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을 포괄함. 그 외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취하기도 함.
- 하지만 모든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 혹은 조합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라고 할 수 없음. 이는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한 집합적 대응의 형식을 이들 조직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러한 조직형태 일반이 사회적 경제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물론 이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범위를 엄격하게 재단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규모의 추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직의 법적 형태에 기초해서 사회적 경제를 범주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사회복지법인,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지원기관(지역자활지원센터, 장애인자립지원기관, 자활공동체 등)관련기관, 대안적인 재정조달기관(재단 및 Micro-Credit 기관), 인증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각종 생산조합 및 소비조합 그리고 신용조합과 공제조합 등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찾아질 수 있을 것임.

□ 사회적 경제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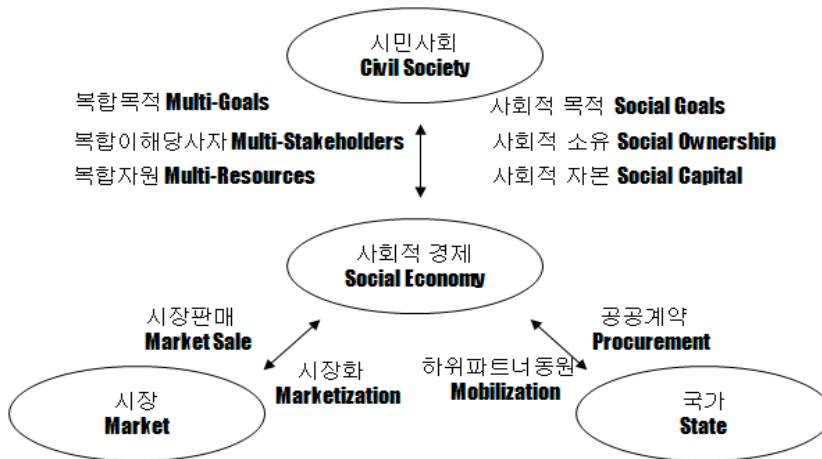
- 노동통합 및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의 직업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이나 지역사회의 필요에 착목한 새로운 일자리영역에서의 일자리창출 활동. 대표적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위한 지원기관 및 사업단으로 장애인자립지원기관 및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각종 자활공동체등의 활동이나, 재활용, 문화, 청소, 급식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틈새를 찾아내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활동들이 이에 해당됨.
- 사회서비스의 제공: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함. 최근 사회서비스 확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물론 아직까지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들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사이의 경쟁을 극복할 방안이 요구됨. 이들이 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영역을 보건, 의료, 노인, 보육, 주거 등으로 다양함.
- 지역개발의 역할: 지역경제가 붕괴된 지역에서 관광사업, 운송사업, 주택사업, 지역식품체계 등의 혁신적인 영역의 발굴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전개함.

□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매개로서 사회적 경제

- 앞에서 사회적 경제는 ①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

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②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③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음.

- 따라서 시민사회는 위와 같은 원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시장과 국가로부터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됨. 하지만 역으로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시민사회가 시장에 의해서 시장화로 경도되거나, 정부의 하위파트너로 동원될 가능성도 존재함.



V. 한국 사회적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

- 생존의 메커니즘이 아닌 발전의 메커니즘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자원에 대한 의존이나 정부부문 주도에 의한 제도적인 추진은 결국 시장지향적인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의 경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의 확장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취약함 속에서 제한적인 자원이 시장부문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조달되는 상황은 사회적 경제의 형성에 있어서 주도성을 시민사회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경제 주체들 사이에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될 수 있음.
- 따라서 시민사회 주도성에 기초한 자율적인 사회적 경제 영역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경제의 전형을 창출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 경제 주체들 사이의 새로운 협력구조의 마련을 통한 블록화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한 시민사회 진영의 상황 인식에 대한 공유와 공동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공유의 방식을 개발하는 노력도 절실할 것임.

VI. 결론: 한국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급진적인 정치·경제적 행위를 통해서 현실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당장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명확함. 하지만 시장과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완자로서 적당히 사회적 관리자로서의 역할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전망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명확함.

- 따라서 사회적 경제가 현실 사회의 대안적인 경제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입증해내는 과정이 요구됨. 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주류적인 경제 방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향후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연구의 방향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포착을 위한 실증연구와 데이터의 개발,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각종 영역에서의 제도적인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재정조달 방안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개발 등으로 모아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구는 매우 절실한 작업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발표된 전북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시론적이지만 선도적인 연구를 이 자료에 첨부하도록 함.

마르크스주의¹⁹⁾ 관점에서 본 MB식 녹색성장 비판과 대안

김민정(조선대 비정규직 강사) good21life@hanmail.net

MB식 녹색성장의 동전의 양면

“더러운 자본주의는 깨끗한 자본주의보다 더 낫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 성장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MB식 녹색 성장은 자본주의 내에서 ‘허용 가능’한 환경 보호는 수용가능하다. 이는 한편으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의 환경적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윤 추구의 경쟁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 전 지구적 환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 목표나 기업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녹색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제사회에 녹색 옷을 입혀라.”²⁰⁾

“단기적으로는 녹색 뉴딜을 통해 재정 지출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녹색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을 추진해 앞으로 20년, 50년 후의 미래 먹을거리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기후 변화의 대응 전략, 선도형 성장 전략을 위한 중장기 국가 패러다임이 바로 녹색 성장입니다. 즉, 녹색성장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요 이미 가고 있는 길입니다”(곽승준, 2009: 6).

국가 비전으로 녹색성장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비전을 실현할 시장의 유무와 경쟁력의 여부이다. 이들은 고부가 가치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 그린오션을 주목한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이산화탄소 감축과 에너지 대책을 국가의 목표로 발표하는 것은 여기에 엄청난 국익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 변화 협상을 경제 협상으로 이해하고 있고 에너지 전쟁의 승자가 경제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녹색성장의 시장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김상협, 2009: 32).

삼성경제 연구원(2008)은 녹색 성장의 부상 배경으로 우선 기후변화 관련 규제 논의의 본격화와 에너지 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한다. 이들의 전망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시장, 신재생에너지 시장 등 녹색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일례로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2007년 640억 달러이지만 2010년에는 1,500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규모도 2017년 2,545억 달러로 2007년(773억 달러)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녹색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는 2009년 1월 미래기획위원회²¹⁾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공동으로 17개의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여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획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낡은 사고방식으로 규정짓는 녹색

19) 마르크스 이론에 기반해서 환경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마르크스 이론이 충분히 생태주의라는 식의 주장이 아니다.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한 환경문제의 해석은 마르크스 이론을 개방적(open)으로 적용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교환 및 시장이나 특정한 수준의 축적과 생산의 특별한 기술로 정의하지 않고 생산의 사회적 관계인 자본-노동의 관계로 설명한다.

20)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제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저탄소 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환경·에너지 아젠다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격상시켰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을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삼기위한 구체적인 전략인 ‘환경·에너지 기술혁신 계획’과 ‘Cool Earth’를 수립하고 경제 산업성 산하 조직인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서 정부와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녹색 산업 관련 차세대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공약에도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강화”와 “그린에너지 산업 시장 창출과 고용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21)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총체적인 국가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08년 4월에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산업화란 녹색 기술, 환경 친화적 경영 모델을 통해 신 시장을 창출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 보호를 통해 경제 성장능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저탄소와 녹색산업이 ‘원만하게’ 결합될 경우,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 성장은 경제 성장과 환경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회를 선점하고자 하는 전력이다. 이를 더 적확하게 지적하면 ‘국익’과 ‘환경보호’를 기업의 ‘이윤 창출’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규제법’이 아닌 ‘지원법’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격은 녹색경제, 녹색기술, 녹색산업을 범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위주의 법이고 산업계에서도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일부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지구온난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기업의 체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규정으로만 최소화 하였습니다”(녹색성장위원회, 2009: 14). 국가가 기업의 공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지원하는 방식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녹색성장으로 부분적인 영역에서는 환경이 좋아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구는 온난화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이끌어 낼 수는 있겠지만 전 지구적 환경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내에서 이윤 경쟁이 허용 가능한 것만을 추진하는 MB식 녹색 성장의 모순이다. 4대강 사업(일명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녹색 성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운동²²⁾이다.²³⁾

인간 사회의 불평등한 관계 고민하기-환경 불평등

녹색 성장은 단지 기업의 이윤 추구 방식을 녹색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녹색 성장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한 인간-자연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을 자연에서 소외도록 한 것은 사회 내의 인간 간의 소외가 원인이며 모든 생태학적 문제는 사회문제에 뿌리를 가진다”라는 복친(1998)의 주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불평등한 인간관계, 즉 환경 불평등을 주목해야한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울리히 벡의 주장처럼, 흔히들 환경문제를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한 문제로 받아드리지 않는 듯하다.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자연과학의 사실에 근거해서 동일한 책임론을 설파한다. 오늘날 전지구적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 때문에,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구인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타당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배적 환경 이데올로기는 환경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는 동시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피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타이타닉 호에서 소수 부자만이 구명보트의 구원을 받았듯이, 환경 피해 역시 사회 구조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된다. 예컨대, 체르노빌 핵폭발사고나 카트리나 재난으로 죽어 간 사람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한반도 최대의 환경 비극인, 삼성중공업에 의한 기름 유출로 생활 기반이 파괴되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농어민들이지 자본가들이 아니다.

환경문제의 책임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진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해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활용과 공해방지 비용 지출에는 인색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주류 정치

22)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들 앞에서 퇴임 뒤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23)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양면성은 MB의 고유한 개별적 특징만은 아니다. 1987년 10월의 어느 월요일, 대치 수상은 특별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화요일, 재무성은 대형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발표했다. 수요일에는 교통부가 차도의 추가 건설에 대한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목요일에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연구하던 에너지 연구청의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건물의 연료 절약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재무부가 발표하였다(Norman Myers, 1999: 106).

인들은 더 많은 국민의 손을 태안 기름 제거 작업에 동원하기를 힘쓰면서도 정작 가해자인 삼성 이견희 회장의 손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환경 복구에 대한 비용 부담의 대부분을 자신의 어깨로부터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층의 어깨로 전가시킨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9월 19일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는 녹색 소비양식 유도, 교육과정 반영처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단기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탄소세가 “분야별·계층별 부담률이 크게 변화되지 않도록 조세 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재계를 달래려 하는데 이는 ‘중립적’인 세금은 서민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탄소세나 유류할증료 같은 비용은 재벌과 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로 이득을 본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감면해 준 부자들의 세금 75조 원은, 이명박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투자 하겠다는 총 금액의 25배에 해당한다. 부자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서슴없이 지갑을 열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깝다는 것이다(김중환, 2008).

**돈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성찰하는 기회나.
자본주의적 시장과 환경 보호는 양립가능한가?**

조명래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기업의 자본 논리를 부분적으로나마 비판적으로 언급하지만 그는 시장 자본주의를 공동체 자본주의 혹은 사회적 자본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종의 작은 사회적 혁명이라고 결론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전형적으로 시장과 자본을 분리시킨 이분법적 사고이다. 시장은 추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은 상품 유통을 통한 가치의 실현 및 분배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끊임없는 자본주의의 존재 조건이자 유지 조건이다. 따라서 시장과 자본은 동일한 존재 조건인 자본주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진(2007)의 지적처럼, 마르크스의 자본 개념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주의’ 혹은 ‘공동체 자본주의’는 형용모순의 사이비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다<김민정, 2007, “자본주의와 환경 경영”글 참조>.

새로운 가치와 모델 등 다양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은 우리를 풍부하게 해준다.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직면하게 될 중요한 질문인, 자본주의 안의 ‘대안적 공동체’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한 모델인가이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보다 상상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과 그것을 지속시킬 방안들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벗어나기

현실에서 노동이 자연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직 노동력만을 소유한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동대상을 소유한 이들에게 제약과 지배를 받아야 하는 자연적 운명에 처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지배-종속 관계의 정당화를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 노동과 연루 맺는 자연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어떠한 자연도 인간에게 관계할 때 일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어질 수 없고 인간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생산 활동에 의해서만 매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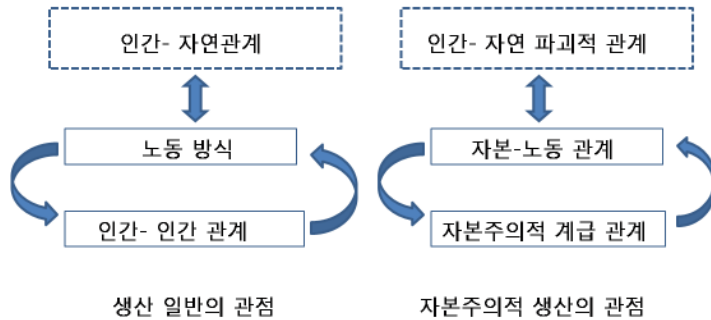
노동은 우선 자연과 인간 사이의 한 과정이고 그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의 자신의 물질대사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또한 노동은 노동수단을 이용하여 인간의 목적을 노동대상 속에 실현하는 ‘합목적적 활동’인 것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것은 자연과 인간과의 물질대사나 노동이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규정을 받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교란되고 파괴되는가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노동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단절된, 파괴된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존 벨라미 포스터(2007)의 지적처럼, 노동이 더욱 더 동질화함에 따라 많은 자연도 동질화되면서 노동이 겪은 것과 유사한 악화과정을 겪었다. 노동자들

의 기능으로부터의 노동과정의 분리와 실행으로부터의 구상의 분리는 복잡하고 숙련된 노동이 단순한 비숙련 노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산림 서식지의 자연적 복합성은 산업적 산림 플랜테이션의 인위적 단순성으로 전화되었다.

이상의 내용인 인간-자연 관계와 인간-인간 관계의 상관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인간-자연 관계와 인간-인간 관계를 서로 매개해주는 것은 노동 방식이다. 노동 방식이 매개되어서 자연과 인간 간의 상호성을 맺게 된다.

인간-자연관계와 인간-인간관계의 상관성



인간 노동이 구체 노동의 형태인 사용가치대로 평가되지 않고 추상적 노동으로 사회적인 평균 노동의 가치로 측정되어 가치 증식이 생산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본주의에선 자본이 생산 요소들인 노동과 노동 대상 및 수단을 규정한다. 생산수단에서 분리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지닌 자본가들에 귀속되고 노동 대상인 자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공장과 기계 등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들이 생산 방식과 생산규모, 생산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자본가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이 산림을 파괴하는 생산의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객관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²⁴⁾

사회 내 인간 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는 방식을 규정하는 노동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본주의에서 직접생산자인 노동자²⁵⁾들은 사회의 부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한다. 직접생산자가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분명한 대안으로 160년 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토지, 공장, 기업체, 은행 등등)에 대한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 및 통제, 이윤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른 사용가치 생산, 계급 철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MB식 녹색성장에 맞선 우리의 요구 및 행동

현재 사회에서 대안 사회로 나가는 ‘가교’로서 진보 진영의 요구 및 행동을 모색해 보는 것은 MB식 녹색성장에 맞선 진보 진영의 연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NGO 단체들의 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과 운동 주체 및 요구 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환경’ 단일한 사회 쟁점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발생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존재 한다. “각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그 시대의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위 두 주장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순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 만약 위 두 문장 중에 하나가 맞다면 노동계급의 승리는 불가피한 것이거나 불가능한 것이다. 노동계급의 의식적 행동과 지배계급의 사상에 복종하는 사이의 균형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박승욱(2007)은 후자를 강조하면서 마치 노동자들의 의식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구시대 노릇을 하는 노동운동만을 부각시키면서 환경문제의 책임에 대해 일정정도 자본가계급과의 연대적 책임을 강변하는 것이다.

25) 마르크스가 잉여가치라고 한 부(富)는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잉여가치를 착취한다. 이 잉여가치가 자본가 계급의 모든 이윤의 원천이고 자본주의 전체의 부도 대부분 이 잉여가치에서 나온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노동계급 운동을 주목하는 것이다.

단일 쟁점 운동의 문제는 그런 쟁점으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쟁점을 다루는 방식이다. 즉, 체제의 다른 문제들에서 떼어내 그 쟁점에만 주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여성 차별은 착취와 관계없고 환경 파괴는 자본주의와 관계없으며 이 모든 쟁점들은 서로 연관이 없고 해결책이 저마다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식으로 말이다. 단일 쟁점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적대 관계가 중심이 아니고 각 적대는 서로 자율적이며 어느 적대가 다른 적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김하영, 2009: 104).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구조적 분석에 기초한 전략적 관점 없이 단일 쟁점 운동에만 몰두한다면 한 지역 차원의 승리가 다른 지역에는 패배를 가져 올수 있다. 진보적 사회 운동들이 한 분야에서 더 세분화되면 되면 될수록 운동 힘의 집중 보다는 분산을 통한 힘의 약화를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의 전략적 관점인 현 정세에서 어떤 특정한 투쟁이 중요하고 운동의 집중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NGO 활동 방식의 목표가 대중행동을 촉발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피케팅 시위 등은 정부 및 기업을 비판하여 대중들의 집단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시민 및 대중을 위해 대신(대리)하여 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합리적인 것에 맞서 대중 스스로가 투쟁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년의 촛불 투쟁처럼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통해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고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확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NGO의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한다.

환경위기를 인식하려면 급진적인 사회적 관심을 폐기처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구 자체의 파괴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확대, 심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문제와 환경문제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기초해야만 변화를 위한 강력한 운동이 출현할 수 있다(폴 맥가, 2000). 환경운동은 적이 우리라는 식의 개인적 행동의 지향에 관심을 두고 금융주의적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반생태학적인 계획을 지양하는 대중의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셋째로 자본주의의 이윤의 메커니즘을 단절시킬 수 있는 주체인 노동자들의 운동을 주목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조합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이라고 불리는 부분운동은 아직까지 전체운동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자신의 사업장의 문제와 임금 문제 등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환경문제나 여타의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환경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문 환경단체들은 그들의 전문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별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각인을 노동자들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한 진보진영의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구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 안을 기반으로 MB식 녹색성장에 맞설 수 있는 대중 운동을 조직하자!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한 우리의 요구

- 반환경적인 사업인 4대 강 정비 사업을 중단하라!
-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 감축해라!
-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라!
-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더 많은 대중교통을 확충하라!
-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라!
- 추가 핵발전소 및 신생 핵폐기장 건설을 중단하라!

<참고문헌>

- 곽승준. 2009. “발간의 말”. 『녹색성장의 길』. 미래기획위원회 엮음. 중앙books.
- 김상협. 2009.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녹색성장의 길』. 미래기획위원회 엮음. 중앙books.
- 김하영. 2009.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책갈피.
- 녹색성장위원회. 200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국무총리실.
- 박승욱. 2007. “사회운동의 전환, 적녹연대로부터”. 《한국사회포럼 자료집》.
- 이지훈 외. 2008. “녹색성장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 675호.
- 김종환. “이명박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기다”. 《저항의 촛불》 10호 2008.10.27.
- 존 벨라미 포스터. 추선영 옮김. 2007.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책갈피.
- 머레이 북친. 박홍규 옮김. 1998.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민음사.
- 노먼 마이어스. 정지인 옮김. 2000. 『가이아의 이론』. 시대의창.
- 폴 먹가. 조성만 옮김. 2002. 『녹색은 적색이다』. 북막스.

전북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김정원(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전주 일꾼쉼터 관장)

1.

○ 전북지역은 오랫동안 공업적 저발전 지역으로 낙후의 대명사였다. 인구는 1966년에 252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인구 감소가 공업 위주의 발전 전략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북지역이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에서 소외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아래 <표 1>은 전북지역의 각종 지표들이다. 전북지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인구, 요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주, 조손가정, 등록장애인 등의 비율이 전국 대비 인구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용률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를 요하는 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사회서비스 부문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창출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는, 또는 활발해야 하는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전북지역 관련 통계 자료

	전국	전북	전국대비 비율
인구*	49,267,751명	1,895,500명	3.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13,352명	118,533명	7.83%
60세 이상 인구*	6,196,545명	335,626명	5.42%
요보호아동*	9,420명	399명	4.24%
소년소녀가장세대주*	2,755명	425명	15.43%
조손가정*	97,574가구	6,532가구	6.69%
등록장애인*	1,869,761명	101,029명	5.40%
여성경제활동참여율**	49.4%	47.3%	
고용률***	58.4%	55.2%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내 통계정보시스템(<http://koisis.nso.go.kr>)에서 참조.

* 2005년 기준

** 2006년 기준

*** 2007년 1월 기준

○ 그런데 이 글은 전북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범주 설정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는 협동조합, 상호부조조직, 결사체, 재단 등의 조직들이 규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설정한다면 살펴봐야 할 대상이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조직들의 많은 수가 공동체적인 경제 활동을 (지향)하며, 이 활동 속에서 구성원의 결속과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령, 농촌에서 존재하는 많은 영농조합은 지역 유지들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협이나 수협과 같은 조직들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자활지원조직, 자활공동체, 인증 사회적 기업, 생협으로 한정해서 전북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전북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살펴본 후 관련 영역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이하 ‘전북네트워크’)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

2-1. 비영리자활지원조직

○ 비영리자활지원조직으로는 지역자활센터와 실업자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지역자활센터 18개소, 실업자지원센터²⁶⁾ 3개소가 활동 중이다. 이 중 실업자지원센터 3개소는 모두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시절에 지역의 시민운동조직과 노동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다.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에서 활동을 했었으며, 특히 전주에서는 당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았던 이른바 ‘소센터’가 몇 곳 더 운영되기도 했었다. 현재는 전주와 군산, 익산 세 곳에서 모두 3개소가 활동 중이며, 모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지역자활센터는 1998년 전주지역자활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18개가 활동 중이다. 전주에 3개, 군산과 익산에 1개, 나머지 지역에 각 1개씩이다. 전북지역은 전국 최초로 모든 지자체에 지역자활센터를 지정받기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연결망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전반적으로 전실련을 중심으로 실업자지원센터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위한 활동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은 이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연결망이 작동해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위한 공동의 대처가 이뤄졌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활동 초창기에 두드러진 활동을 한 성공회 나눔의집이 갖고 있던 사회연결망이 작동을 했다. 이미 활동 중이던 전주지역자활센터가 지역의 주민운동진영 및 성공회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지정에 공동으로 대처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결망의 작동은 지역의 복지관들이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정보 입수 및 준비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개인이 지정을 받았던 1개소를 제외하고는 지역자활센터를 지정받은 조직들이 약함과 강함의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이 연결망 내에 포함되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전국 최초의 지부 결성을 비롯해서 2000년대 초까지가 전북지역의 지역자활센터 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던 것은 이러한 연결망의 효과가 컸었다고 할 수 있다.

○ 비영리자활지원조직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월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 현황은 <표 2>와 같다. 사업단 수로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60개(참여인원 564명),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76개(참여인원 897명), 기타사업단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사업단은 대개 복권기금의 지원에 의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며,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돌봄서비스 부문에 포함된다. 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자활센터가 자활근로로 간병인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공부방에 교사를 파견하거나 직접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돌봄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집수리사업단이 20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자원재활용사업과 영농사업도 비중이 큰 사업이다. 한편, 성별로 분류를 하면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이 확인되고 있다.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북지역의 경우도 자활사업단 간의 네트워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간병, 집수리, 폐자원, 영농, 공부방 등의 자활사업단들에서 네트워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표 2> 전라북도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 현황(2006년 9월 현재)

26) 이 글에서는 전실련 소속의 실업운동조직을 실업자지원센터라 칭한다.

계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기타사업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170	51	85	136	357	1104	1461	15	558	573

자료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홈페이지(http://www.jahwal.or.kr) 월보시스템 참조 구성.

○ 실업자지원센터들은 모두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참여하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돌봄서비스 부문이다(<표 3> 참조).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외에 전주시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희망사업단과 산림청의 자활영림단 도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온고을영림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 참여자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활을 목표로 한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시니어클럽과 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가 있다. 시니어 클럽은 2007년 현재 전라북도에 5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전주시에만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조직이다. 부업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는 모두 6개가 활동 중이다. 이 중 시니어클럽은 지부를 결성해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에는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가 2006년에 결성되어 시니어클럽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산하 시군취업지원센터,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는 매년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2-2.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조직

○ 2006년 현재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다시피 전북지역에서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활동은 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돌봄서비스 영역임을 고려한다면, 빈곤 또는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지원-비영리부문 위탁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는 중년 빈곤층 여성 중심의 새로운 노동시장으로서의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전주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군산과 익산 등 도시 지역의 비영리조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이 중 익산의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이 2007년에, (사)전통문화사랑모임이 2008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그 밖의 일부 조직들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하거나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의 인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조직 간의 별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경우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전북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표 3> 전라북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선정현황(2006년 6월)

단체	사업명	선정인원
전주자활후견기관	저소득중년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간병인 사업	12
군산종합복지관	방과후 학습지도강사 파견사업	10
임실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지역어르신 주.단기보호 및 재가독거어르신가사지원사업	15
덕삼종합사회복지관	노인시설프로그램전문요원파견사업	10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사업	11
소망호스피스	말기환우와 노인을 위한 간병인	11
(사)전북보건복지센터	취약계층의 올바른식습관형성 및 건강증진을 위한 ‘웰빙건강’ 식당 운영	10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전주지부	꿈마을장애인가정지원사업-중증장애아동보유 및 교육지원	10

참고자료

서원노인복지회관	이동노인복지관사업	10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가사관리사 살림네	11
(사)농촌복지센터	재가노인을 위한 가중봉사원파견사업	12
전북익산노인인력지원기관	하얀세상 세탁방 사업	12
(사)사랑의손길새소망	장애인 재활지원사업 강화 및 전문인 양성프로그램	10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저소득층 및 일반가정가사도우미사업	18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출장산모도우미 사업	10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단	10
군산YWCA	전문보육, 가사도우미	10
덕진재가노인복지센터	행복나눔실비간병인파견사업	10
(사)전통문화사랑모임	전통, 지역 문화체험 및 상품개발프로그램 사업	14
(사)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방과후 교실	11
전북생명의숲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태교육전문가 양성	10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주민사회문화교육	10
시민교육센터	군산청학야학교 운영	10
(사)전북성매여성인권지원센터	탈성매매여성 “녹색가게운영”사업	13
원광효도식품	잉여음식을 활용한 전통맛 살리기	10
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	재래시장활성화 안내도우미지원사업	10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수출, 내수용 양말 가공	10
계		300

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rab.go.kr>)에서 인용.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조직이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 중 현재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익산의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이 장애인 관련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받았으나, 직업재활시설의 활동으로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표 4> 전라북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시설 유형별	시군	시설명	근로 장애인수(명)			종사자수(명)		주요생산품
			계	시설	재가	06년	07년	
		11개소(도1,시군10)	304	212	92	27	38	
보호 작업 (8)	전주	도립 보호작업장	21	5	16	3	3	행정봉투, 불교용품인쇄
		자립 보호작업장	31	28	3	3	4	생활도자기
		동암 자활자립장	25	25		3	3	케익 약세사리, 박스 등
	군산	추진보호자립작업장(개인)	23		23		3	박스입가공, 생활도자기 제과제빵
	익산	영산원 보호작업장	40	40		4	4	박스입가공, 생활도자기 제과제빵
		동그라미 보호작업장	42	30	12	5	5	압화, 상자접기, 전선코드접착
	정읍	자애 자립장	18	18		3	3	청소기부품조립, 버섯
	김제	영광의집 자립장	31	26	5	4	4	쇼팽백, 생활도자기
완주	행복한집 자립장	30	20	10		3	폐침묵재활용, 김치가공 등	
직업훈련	익산	보성원 자활자립장	20	20		2	3	안마교육
작업활동	전주	기린작업활동시설	23		23		3	작업치료(조립), 직업적응훈련 등
생산품 판매센터	익산	곰두리 공판장				4	4	장애인생산품목 일절

자료 : 전라북도 내부 자료 인용.

2-4. 자활공동체

○ 2006년 12월 현재 자활공동체는 모두 35개이다. 전라북도(2007)에 의하면 전북지역에는 35개 자활공동

체에 총 147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집수리(도배 포함)가 13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음식점 및 제과점 6개, 농장 5개, 폐자원재활용(재활용의류판매점 포함) 5개, 간병 및 산모도우미 3개, 기타 3개(도시락 제조, 의류기 제작, 세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보다 집수리가 자활공동체 비중이 가장 큰 이유는 현물주거급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수리 자활공동체들의 미래가 반드시 밝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바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3년 의무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 사업의 운영을 둘러싸고 지자체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일부 자활공동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표 5>에 나와있는 조직 중에는 남원의 '흙살림 새벽'이 '새벽공동체영농조합'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007년에 자활공동체 인증을 받은 조직 중에 전주의 '사랑과 환경', 진안의 '나눔푸드'가 각각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한편, 집수리 자활공동체 중 일부는 지역에서 주거복지센터로서의 전망을 갖고 좀 더 복합적인 실천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표 5> 전북지역 자활공동체 현황(2006년 12월 현재)

시·군명	자활공동체명	사업내용	참여인원(명)
계	35 공동체		147
전주시	작은사랑간병인회	간병서비스	17
전주시	오늘	일반음식점	4
전주시	나눔의 녹색가게	재활용의류판매	3
전주시	필 건축 인테리어	집수리사업	6
전주시	데포방트	현웃, 폐유 수집	2
전주시	아기나히	산모돌봄서비스	7
전주시	희망의 폐품수집	폐자원 수거판매	2
전주시	생명살림	유정란 생산및판매	4
전주시	웰빙 우리밀	제과제빵	2
군산시	희나연주거복지	도배,장판,건재도소매	3
군산시	희나연식품	도시락 제조, 판매	3
군산시	희나연농장	느타리버섯재배	2
군산시	나눔지업사	도배, 장판	4
군산시	한마음간병센터	간병교육,유무료간병	4
익산시	하누리 인테리어	건설업,도소매업	7
익산시	미감건축	주택수리, 리모델링	4
익산시	배산건축	집수리	2
정읍시	드림건축	주택수리	11
정읍시	해오름천연페인트	주택수리(페인트)	1
정읍시	밀밭풍경	우리밀 제과제빵	1
정읍시	천고당	한식당	2
정읍시	태영농장	양계장(육계)	2
남원시	흙살림새벽	농산물	4
남원시	새벽건축	주택수리, 도배	4
남원시	새벽자원재활	잡병 재활용 수거등	2
김제시	도배나라	지업사	7
김제시	전자마을여성	의료기제작	6
김제시	돌가마	음식점	6
완주군	한아름건축	집수리	2
무주군	새터건축	집수리	7
임실군	그린환경	폐자원 재활용	2

순창군	가우리	일반음식점	5
고창군	웃사랑빨래터	옷수선 및 세탁	3
고창군	다솜장식	도배장판	4
부안군	푸른먹거리	유기농산물판매장	2

자료 : 전라북도

(2007)에서 인용.

2-5. 인증 사회적 기업

○ 2008년 7월 31일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은 모두 5개이다. 2007년 1차 인증에서 ‘새벽공동체영농조합’과 ‘(사)사랑의 손길 새희망’이, 2차 인증에서 ‘사람과 환경’이, 2008년 1차 인증에서 ‘(사)전통문화사랑모임’이, 2차 인증에서 ‘(유)나눔푸드’가 각각 인증을 받았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중 ‘새벽공동체영농조합’, ‘사람과 환경’, ‘(유)나눔푸드’는 자활공동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사)사랑의 손길 새희망’과 ‘(사)전통문화사랑모임’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기반이 되었다. 지역별로는 ‘새벽공동체영농조합’과 ‘(유)나눔푸드’가 남원과 진안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해있으며, ‘(사)사랑의 손길 새희망’은 익산, ‘사람과 환경’과 ‘(사)전통문화사랑모임’이 전주에 위치해있다.

○ 각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새벽공동체영농조합’은 처음 자활지원사업으로 시작할 때부터 유기농영농조합을 지향했었다. 남원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2개의 식당과 회원 판매, 도매, 납품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며, 농산물 외에 200두 가량의 돼지를 키우고 있기도 하다. 남원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재활용사업단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 ‘(사)사랑의 손길 새희망’은 장애아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해온 활동이 기반이 되어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적 기업 인증 이후 도시락 제조와 집수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사람과 환경’은 가정용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사업장으로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자활지원사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고자 규모화를 지향했었다. 이와 비슷한 사업을 구상해온 조직들 중에는 선도적인 활동을 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도 지역 내 연계나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사)전통문화사랑모임은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활동가들의 모임에서 출발했으며, 주로 문화를 매개로 지역재생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구도심의 빈점포를 미술관으로 활용해 기초 예술가들에게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낙후된 시장에 문화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는 농촌의 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방식의 도농교류를 조직화하는 등 최근 2~3년 사이에 매우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 (유)나눔푸드는 SK의 지원을 받은 행복도시락센터 중 하나이다. 모두 6개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행복도시락센터 중 유일하게 농촌에 위치해있기도 하다. 자치단체로부터 도시락배달 사업을 위탁받고 있으며, 진안지역자활센터의 영농사업단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식자재의 공급은 진안 내에서 해결하는 등 로컬푸드적 실천을 하고 있기도 하다.

2-6. 생협

○ 전라북도에서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은 모두 6개이다. 한울생협, 전주생협, 정읍전주한살림생협, 생명생협, 익산생협, 익산숨리생협, 남원생협이 그것이다. 이밖에 전주의료생협이 있고, 자활공동체인 ‘푸른먹거리’가 지역의 생산자 조직 및 각종 시민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군산의 군산유기농매장이 있다.

○ 1991년에 전업주부들이 직거래운동으로 출발한 한울생협은 전북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가장 규모가 큰 생협이다. 2007년 8월 현재까지 생협으로 인가가 난 유일한 조직이기도 하다.

○ 전주생협, 익산습리생협, 남원생협은 모두 icoop생협연대 소속 조직이다. 이중 익산습리생협이 2004년에 출범했고, 남원생협과 전주생협은 2006년에 출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직 짧은 연혁 탓인지 세 조직 모두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읍·전주한살림생협은 전국적인 조직인 한살림생협 소속이다. 정읍에서 먼저 시작해 활동을 하다가 2004년에 전주에 매장을 열었다.

○ 생명생협과 익산생협은 회원이 있고,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유통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직은 각각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와 익산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이기도 하다. 두 조직 모두 지역자활센터의 영농사업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했으며, 생협으로서의 조직적인 활동은 취약한 편이다.

○ 군산유기농매장은 한울생협과 비슷한 연혁을 지닌 오래된 조직으로 군산생협이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으나 법인으로 등록할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종의 유사생협이라고 할 수 있다.

○ 부안의 ‘푸른먹거리’는 부안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자활공동체이다. 부안의 경우 다른 군 지역에 비해 지역의 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이 많다. 푸른먹거리는 이러한 부안의 장점이 잘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역의 생산자 조직들로부터 납품을 받고 전교조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을 회원의 주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결식계층지원사업에 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비슷한 실험이 진안에서도 있었으나 얼마 가지 못했다.

○ 전주의료생협은 2003년에 발족했으며 한국의료생협연대에 소속해 있다. 초창기에는 한방과 양방을 모두 운영했으나 얼마 못가서 양방은 문을 닫고 현재 한의원만 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의료생협연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해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를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 전북 지역의 생협은 주로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반영되어 시작했고 그 활동도 주로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을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등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이벤트(ex: 생명학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밖의 사회적 실천은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나 한미FTA 반대운동에 참여한 것이 최근 눈에 보이는 활동이다. 촛불 정국에서 이들의 조직적인 참여가 눈에 띄기도 했다. 생협들 간의 연대 활동은 그리 없는 편이며, 익산생협이나 생명생협, 푸른먹거리 등 자활지원사업과 연계된 조직들의 활동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 전북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시행을 앞두고 2007년 5월 22일에 발족했다. 전북네트워크는 “① 지역사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확대, ② 각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관련 활동 주체들간의 네트워킹, ③ 지방정부를 추동해서 각종 제도의 정비를 이끌어내고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④ 지방정부를 추동해서 인프라 구축 유도, ⑤ 지역사회 내 보호된 시장의 형성을 이끌어내는 것, ⑥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동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네트워크 내에는 조례제정분과, 지역조사실무자교육분과, 사업단네트워크지원분과가 구성되어 있다. 이중 사업단네트워크지원분과는 포럼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주거복지포럼과 환경재활용포럼, 돌봄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주거복지포럼은 집수리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들 중 일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재활용포럼에는 아름다운가게,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의제21, 애들아 하늘밥 먹자 등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돌봄포럼은 전북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해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자활센터 및 실업자지원센터의 일부가 참여하고 있다.

○ 전북네트워크는 이밖에 전라북도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각종 협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타 지역 탐방, 지역내 사회적 기업 준비 조직들에 대한 방문 및 자문, 사회적 기업 설명회, 지역적합형 사회적 기업 모델 수립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간 등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들이다. 자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했다.

○ 이밖에 전북네트워크 밖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모여 ‘빈곤 포럼’이라는 학습모임을 2007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 끝으로 전북지역에서 공정무역이나 지역화폐와 관련된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자면다음과 같다.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아직 조직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아름다운가게가 일부 제품에 대해서 유통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북지역만 국한된 사례는 아닐 것이다. 또한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90년대 후반에 근로자선교상담소가 주관하는 ‘품앗이’가 시도된 적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소멸된 사례가 있다.

자본주의와 환경 경영

김민정*1)

이 논문은 우선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입각하여 자연의 사용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하려는 환경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상품 물신주의임을 비판한다.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에선 자연이 이중적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두 가지 차원, 즉 일시적 자본축적의 위기와 인간 생존조건의 위기로 구분될 수 있음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환경 경영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고찰한 후 자본축적 과정의 내적 논리에서 추동된 불변자본의 절약 노력이 환경 경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다.

다른 한편 사회적 측면에선 환경단체 등의 압력으로 기업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윤의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환경 경영이 강제될 수도 있음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환경 경영이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서 갖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환경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주요 용어: 노동가치론,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 환경 경영, 불변자본의 절약.

* 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수료, 사회학, good21life@hanmail.net.

1. 서론

다국적 석유화학 기업의 대표격인 셰브론(Chevron) 사의 조지 켈러(G. Keller) 회장은 1987년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진짜’ 환경주의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생명을 원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인도 대다수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법의 형식과 정신을 절대 준수하기로 한 우리 셰브론 사의 환경 정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Hawken, 2004 : 175)라고 앞으로 변화할 기업의 새로운 위상을 밝혔다.

올해 세계철강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포스코의 이구택 회장 역시 《포스코신문》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과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가 전통적으로 자랑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20세기 후반의 재앙적 환경 위기의 등장은 기업가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조건에서 기업의 소유주와 운영자들은 친환경적 선전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과 ‘선전’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을까?

기업가들과 기업에 친화적인 정치인들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듯 보인다. 조지 켈러 회장이 밝힌 기업의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셰브론 사는 정부의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에 반대해 온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 9만 5천 달러를 지원했다. 단지 몇몇 기업만 그런 것은 아니다. 쉘(Shell)과 제너럴모터스(GM)도 20세기 후반 기업의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선언하고 반환경적이었던 기업 이미지의 재고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환경단체의 노력에 체계적으로 반대해 온 것이 현실이다.

밀턴 모스코비츠(M. Moskowitz)는 ‘경영 윤리’(Business Ethic) 15주년 기념 발표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역사를 살펴보자. 나는 그것이 95%의 수사와 5%의 실천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Vogel, 2005: 41)고 고백한다. 그가 고려했을지는 모르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태도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선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현재 ‘환경 경영’은 기업 본래의 목적인 이윤 획득을 위한 활동에서 환경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박창길(2004)에 의하면 환경 경영에 대한 기존 연구들(Shrivastava, 1998; 한상훈, 1995; 황병문강우임재화, 2000; 정현배, 1995; 김종대, 1996)(Shrivastava, 1998)은 기업 실무자들의 입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박창길의 연구는 환경 경영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는 환경 경영은 자본주의 기업 활동의 반환경적 전제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제한된 문제 해결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다룸으로써 생태계 파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는 환경 경영의 장밋빛 미래만 보여준 다른 연구와 달리 자본주의적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환경 경영에 대한 선행 연구 중 조명래(2006)²⁾는 분열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경제를 공동체 경제로 되돌

1)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환경 경영을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이병욱 외 2인, 2005: 148). 첫째, 환경 경영전략(전사적 전략, 사업단위 전략, 기능별 전략, 환경방침, 전략적 실천 계획, 전략모형 분석), 둘째, 그린 조직(그린조직 구조, 조직구성원의 역할 및 권한, 교육과 훈련, 동기부여), 셋째, 청정생산(청정 생산기술, 청정생산 기법, 환경 친화적 설계, 폐기물 최소화, 자원 재활용), 넷째, 그린마케팅(녹색소비자, 환경시장, 그린마케팅 믹스, 그린제품, 그린가격, 그린유통), 다섯째, 녹색구매(친환경 공급망, 관리, 협력 업체에 대한 교육 훈련,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여섯째, 환경회계(환경비용 분석 및 배분, 투자 분석 및 평가, 환경성과 평가, 환경보고).

2) 조명래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기업의 자본 논리를 부분적으로나마 비판적으로 언급하지만 그는 시장 자본주의를 공동체 자본주의 혹은 사회적 자본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종의 작은 사회적 혁명이라고 결론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전형적으로 시장과 자본을 분리시킨 이분법적 사고이다. 시장은 추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시장은 상품 유통을 통한 가치의 실현 및 분배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끊임없는 자본주의의 존재 조건이자 유지 조건이다. 따라서 시장과 자본은 동일한 존재 조건인 자본주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진(2007)의 지적처럼, 마르크스의 자본 개념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주의’ 혹은 ‘공동체 자

리기 위해 사회적 성원으로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윤리적 입장에서 강조한다. 그는 시장에서의 파괴적 경쟁이 자본 자체에 내재한 본성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조명래의 연구에서 보이듯 한국에서의 환경 경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부족한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창길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환경 경영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존 벨라미 포스터(Foster, 2007)는 자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환경을 시장에 통합시키려는 작업이 자본주의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선 자본주의를 녹색화하려는 기업의 시도에 대한 포스터의 비판을 마르크스 가치론적 분석 차원에서 입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우선 노동가치론에 입각하여 자연의 사용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하려는 환경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환경 경영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고찰한 후 자본 축적 과정의 내적 논리에서 추동된 불변자본의 절약 노력이 환경 경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적 측면에선 환경 단체 등의 압력으로 기업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윤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환경 경영이 강제될 수도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환경 경영이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서 받는 제약과 이의 극복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자연의 이중적 평가

패스모어(J. Passmore)가 지적하듯 공장 소유주는 그 자신의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이를테면 원자재, 노동력, 기계설비, 감가상각, 세금,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만 반드시 치르면 될 것으로 계산한다. 그는 존 부인(각주 삭제!!)의 집안 커튼을 못 쓰게 만든 원인이 바로 그의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이라고 할지라도 그 커튼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치를 생각은 하지 않는다(Grundman, 1994: 55).

패스모어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주류 경제학 내 환경경제학 또는 생태경제학자들은 환경 문제의 외부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며, 일부 환경경제학자들이나 생태경제학자들은 도덕적·심리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³⁾ 이들은 주류 경제학의 가치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고 풍부화한다면 일정 정도 환경 문제의 외부화는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존 국내총생산(GDP)⁴⁾에 환경 항목을 수치로 계량화해서 만든 녹색 GDP(Green GDP)다. 이러한 기법으로 환경 문제의 외부화가 일부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환경 개선비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경우가 그와 같은 사례다.

자연 및 환경에 가치를 부과하는 방법적 어려움 때문에 지구에 가격 매기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비용 계산 방법의 다양한 기법들을 고안하기만 한다면 해결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미 물과 공기를 사고파는 현실에서 가격매기기의 방법론적 난제의 해결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에게 가격을 매기는 행위를 윤리적 기준에 의해 비판할 수만은 없다. 이미 자본주의는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인간 중 내부에서 소수의 특정 인간이 대다수의 인간을 가격으로 흥정하는 그런 비도덕적

본주의'는 형용모순의 사이비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다.

3) 워릭 폭스(Fox, 1990)는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적 가치를 생명 유지의 터전, 조기경보 시스템, 과학적 연구를 위한 실험실, 다양한 유전물질의 보고, 몸의 휴식처, 심미적 예술 전시관, 정신의 안식처, 상징적 기념관, 심리적 건강 및 성숙의 터전으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측정하는 방법의 도입을 제안한다. 자연환경 사용에 따른 가치의 변화를 직접적인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인 전통적 시장가격 접근법과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평가하거나 그것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할 때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 예컨대, 해당 지역의 맑은 공기나 자연환경 등을 함축적 가격으로 측정하는 만족가격 접근법과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 수요자를 고려한 수요함수체계법에 의한 측정 방법, 소비자가 만족하는 환경 질에 대한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이 있다.

4) 케네디(R. F. Kennedy)는 GNP(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생산)에 현재의 질적 만족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한다. “국민 총생산에는 대기오염과 담배광고와 고속도로의 시체를 치우는 구급차가 포함된다. 문을 잠그는 특수열쇠와 그 열쇠를 부순 자들을 잡아 가두는 감옥도 계산에 포함된다. 국민총생산에는 삼나무 숲의 파괴와 슈피리어 호의 죽음도 포함된다. 국민총생산은 내이팜탄과 핵미사일과 함께 성장한다. 이 모든 것이 국민 총생산에 포함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 가족들의 건강, 그들이 받은 교육의 질, 놀이의 기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에서의 예절이나 길거리의 안전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시의 아름다움도, 지적인 대중토론포도, 공무원들의 성실함도 포함되지 못한다”(Myers, 1999: 241).

사회다.

자연에 가격을 매기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의 오류는 자연의 교환가치화가 또 다른 물신주의를 표현한다는 것에 있다. 자본주의에선 개별 기업의 운영에서 직·간접적인 원료, 공장의 부대 환경 이외에 자연의 사용가치를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다. 이에 반기를 든 환경경제학자들은 기업이 고려하지 않는 모든 자연의 사용가치를 상품으로 취급하자고 제안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물신적 속성 속에서 자연의 사용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 아래서 자연의 사용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관심 밖으로 취급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이 해결되지 못한 자본주의에서 외부비용으로 처리되는 환경을 내부비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환경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일반화된 상품체계인 자본주의에서는 사용가치와 가치가 분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교환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상품 물신성에 지배받는 자본가들은 화폐로 교환 가능할 때만 가치를 생산한다. 상품 형태의 신비성은 인간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생산물 자체의 물적 성격으로 보이게 만들며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로 보이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신비성은 인간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재화의 자연적 속성으로 보이게 만들어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상품의 사회적 관계로 치환한다.

상품은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가치와 가치를 갖는다. 사용가치는 물건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간에게 유용한 성질이고 가치는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의 양이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재화는 사용가치와 가치 모두를 포함할 때만 상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사용가치를 생산하고 이것이 교환되어야 상품이 된다. 인간에게 유용성을 주는 자연의 사용가치가 상품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결정된다. 도시화로 사람들이 자연의 유용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을 상품화하려는 경향을 더욱 커지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태관광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사람이나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품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상품으로 만들려는 주체가 있어도 신선한 허말라야 공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나 공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품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연의 본래적인 가치인 공기, 초원, 야생 수목의 유용성은 노동이 매개되지 않아도 사용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사용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활동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유용성을 갖고 있지만 깊은 산속에 흐르는 샘물이 페트병에 담겨 시장의 진열대에 놓여지기 전엔 상품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이 사용가치와 가치의 인위적인 분리를 통해 모순을 만들어내고, 이 모순은 상품의 교환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갖지 않는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르크스가 상품의 가치(상품 속에 투하된 일반적 인간의 노동의 크기에 따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 형태의 노동으로부터의 추상(마르크스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의 노동 일반의 지출”)은 『자본론』 제1장의 몇 페이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관리자, 산업공학자의 사고 속에서도 존재한다(Braverman, 1991: 161-161). 특히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의 기업 활동에서 이러한 생각은 합리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표현만큼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⁵⁾.

자연이 사용가치와 가치로 동시에 표현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그 이중의 표현이 갖는 모순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가치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표현되지 않고 교환가치를 매개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용가치와 가치는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 교환가치의 매개로 인한 사용가치와 가치의 굴절은 자연에 대한 태도에서도 반복된다. 자연의 이중적 가치평가는 사용가치의 모습과 가치의

5)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스타인벡(J. E. Steinbeck)의 소설 『분노의 포도』는 농촌의 산업화 현상의 비참함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자본의 농업 기계화로 경작지를 잃은 오클라호마의 농민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젓과 낫이 흐르는 땅을 찾아 헤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노동력 착취와 질병, 배고픔이었다. 소설은 처참한 이 과정을 간결한 문체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사람들을 일터로 몰아내는 트랙터, 짐을 운반하는 환상 철도, 생산하는 기계,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늘어만 갔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거대한 소유지의 부스러기를 찾아 길가의 땅에 갈망의 눈길을 보내면서 국도를 허겁지겁 돌아다녔다.”

모습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일반의 사용가치-가치의 모순이 자연에 대한 태도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환가치를 통한 사용가치와 가치의 굴절은 자연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생산요소를 사용가치와 가치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사용가치 측면에서는 노동과 노동수단, 노동대상으로 구분되고 가치 측면에서는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으로 분류된다. 사용가치 측면에서 생산요소들은 내부적 한계가 측정된다. 인간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면 그의 체력은 바닥이 날 것이고 비옥도를 다 써버린 땅에서는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치 측면에서 생산요소들은 제약조건 없는 무한한 자기증식 과정만을 고려한다. 더 싸고 튼튼한 노동력의 공급과 쉽 없이 돌아가는 공장기계에서 형성되는 가치는 무한히 생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용가치와 가치의 상호 충돌은 하나뿐인 지구라는(사용가치 측면에서의) 자연적 제약과 자본의 무한한 자기증식 과정과 모순된다. 자연의 한계 안에서 자본의 무한한 자기증식 과정이 진행되며 자본의 무한한 자기증식 과정 안에서 자연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환경 문제’는 ‘외부화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가치와 가치의 모순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 관계 그 자체에 내재해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폴 버켓(Burkett, 2003)은 자본 축적과 자연적 부의 모순이 서로 구별되는 두 유형의 환경 위기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유형인 자본 축적 위기는 부의 자연적 생산 조건들을 중시하지 못해서 생산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부족은 이와 같은 위기가 발현되는 한 형태이다. 또한 자본 축적은 자신이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환경 재앙에 의해서도 중단될 수 있다. 이 위기는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품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물질과 에너지 처리량도 증가시키는 자본의 경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연적 부의 약탈과 오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심지어 - 그 자신의 화폐 축적이라는 점에서 -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위기’와 ‘자본 축적의 위기’가 동일하지 않다. 이 경향은 생산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의 사용 가능성에 일시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자본주의 내에 보존문제를 일으키지만,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은 보존에 대한 진정한 생태적 접근을 반대한다. 두 번째 유형의 환경 위기는 인간적-자연적 부의 질적 위기 또는 인간 발전 조건들의 위기이다. 생명체로서 인간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환경 위기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만을 살펴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사용가치는 양적-물질적 한계가 규정되지만 화폐를 매개로 한 가치는 그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무한 운동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는 (이윤사슬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진행된다. 이런 점 때문에 현실에서는 자본 축적의 위기와 인간 생존 조건의 위기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3. 불변자본의 절약을 통한 자본 축적

자본주의가 한 번 생산하고 끝난다면 자본가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의 자연 자원과 노동을 투입할 것이다. 마치 도박꾼들이 마지막 판에 전 재산을 걸듯이 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재생산을 고려해야만 한다. 재생산의 중단은 곧 자본주의의 위기를 뜻한다. 재생산이 중단된 최악의 상황인 공황이 바로 자본주의 위기 그 자체이다. 자본 축적을 유지해야만 자본규모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축적은 자본가의 의지를 넘어서게 된다. 자본주의 존재 그 자체가 재생산을 통한 축적을 자본가에게 필연적 운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자본가들이 축적을 필연적 운명으로 받아들여도 의지만으로 축적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축적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산 규정 자체가 물질 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확대재생산도 사회의 물질 조건이 실현되는 한에서 가능하다. 확대재생산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화폐의 축적이 존재하지만 생산에 투입되어야만 하는 원료가 없다면 생산은 계속될 수 없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여러 방법(그것이 ‘직관’이든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한 ‘과학’이던 간에)에 의지해 그들이 필요한 생산요소가 갖는 사용가치의 양적 제한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면, 포스코는 철광석과 석회석의 매장량을 조사하여 동종 기업보다 더 안전한 원료 공급원 확보에 주력하고 주요 자동차회사들은 석유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상용화가 가능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개별 자본가들이 자사에 필

요한 불변자본에 따라 사용가치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가치로 측정된 자연 자원만이 그들의 관심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자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주장과 그들이 자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면적으로만 옳은 주장이다. 이 두 주장은 모두 진실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자본가들이 자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지의 여부는 자본의 이윤 획득을 위한 생산 활동에 필요한가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이윤증대는 고정적 불변자본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만든다. 개별 수공업 단위로 이루어지던 생산 공정이 기계의 도입을 계기로 대규모 노동자들의 공동 작업이 기본 조건이 된 공장제 생산으로 전환되었다. 수많은 경상비는 작은 생산 단위나 큰 생산 단위에 큰 차이 없이 지출되는 것이므로 이왕이면 생산 공정들이 모여 있어 대규모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더 많은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불변자본의 절약은 공동노동, 협업에 기반한 사회적 노동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분업에 기초한 협업은 생산수단의 집중을 가속화시켜 기계의 도입을 통한 대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이 과정에서 생산수단의 집중과 대규모 사용에서 오는 절약은(가변자본의 크기와 잉여가치율이 주어져 있는 경우) 자본가의 이윤 증대로 나타난다. 사회적 노동의 결과로 생긴 이점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의 주머니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불변자본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본가로 하여금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게 한다. 이를 마르크스는 자본의 본능이라고 지적한다(『자본론』 3권 제5장 참조).

끊임없는 이윤 추구의 욕구는 불변자본의 절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정적 불변자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변자본의 소유자인 자본가의 절약 욕망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환경경제학의 표현인 ‘환경효율’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doing more with less) 하는 것을 말한다.

1975년 3M은 친환경적 프로그램인 3P(Pollution Prevention Program: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프로그램)를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20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77만 1천 톤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했으며 1997년까지 8억 1천만 달러라는 놀라운 액수를 절약할 수 있었다(Myers, 1999: 126). 환경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환경이 곧 돈이 된다’ 또는 ‘환경오염을 줄이면 돈도 많이 번다’고 주장한다⁶⁾.

생산 요소들의 절약은 한편에서 생산 폐기물에 대한 절약을 동반한다. “생산의 배설물을 자기의 산업분야나 다른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생산 요소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폐물이 다시 생산과 소비의 순환 속에서 들어오는 과정이다. …… 대규모의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대량의 폐물이 나오며, 이리하여 폐물 그것이 새로운 거래 대상이 되고 새로운 생산 요소가 된다. 폐물은 공동생산의 폐물 따라서 대규모 생산의 폐물로서만 생산과정에 대하여 이러한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고 교환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된다”(Marx, 2004: 91). 재활용의 차원을 넘어선 업사이클링(Up-Cycling)은 원래의 물질이 다시 사용될 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낫거나 이전과 똑같은 품질로 생산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기업들은 자원 및 폐기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용하는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요람에서 요람까지’ 원칙으로 모든 자원을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방식을 고안한 것이다.

업사이클링을 위한 산업생태학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는 덴마크의 칼룬보르(Kalundborg) 사가 있다. 이곳은 제로 방출⁷⁾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칼룬보르에서는 화력발전소, 정유업체,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문 제약업체, 시트록 공장, 콘크리트 제조업체, 황산 제조업체, 도시난방시설, 양어장, 온실, 농장 등이 상호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협력은 1980년 아스네스 발전소가 증기 형태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증기를 압축·액화해서 인근의 피오르드로 방출했지만 지금은 증기를

6) 마이어(Myers, 2006)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통탄하고 있다. “언제쯤이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명백히 인식할 것인가? 왜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다른 기업들도 모두 오염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수조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그는 질문하면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지만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싫어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를 심각하게 의심한다. 현실경제의 무지가 마이어를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한 생각으로 이끌었다. 다른 기업들은 기존 생산 라인과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3P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산과정을 바뀌지 않는다. 무엇보다 마르크스의 기계대체 한계 범위(『자본론』 1권 15장 참고)를 고려한다면 친환경적 신기술 및 기계의 도입은 임금이 높을 때 가능하다. 노동력의 가격이 기계를 대신하는 것보다 싸다면 애써서 친환경 기계 및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일부 공해 산업들(대표적인 예로는 원전레이온)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사회운동의 저항을 받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생산을 계속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싼 임금의 산업예비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7) 제로방출산업은 한 산업의 폐기물이 다른 산업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곧바로 정유업체 스타토일과 제약업체 노보 노르디스크로 보낸다. 공공업체가 운영하는 온실과 양어장도 이 잉여 열로 운영되며 지역민들도 3500대의 기름보일러를 돌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스타토일 정유회사가 만들어낸 잉여 가스는 1991년 이전에는 황 함유량이 높아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업체가 탈황설비 시설을 만든 후 깨끗해진 가스는 시트록 제조업체 지프록과 화력 발전소에 팔아 약 3만 톤의 석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제거된 황은 화학업체 케미라에 판다. 아스네스 발전소의 폐열로 가동되는 황 제거 공정에서는 황산칼슘도 생성되는데 이 황산칼슘은 지프록에서 사서 천연 석고 대용으로 쓴다. 화력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각재는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생산에 쓴다. 정유업체에서 나오는 폐열은 양어장 물을 데우는 데 쓰이고 양어장에서 자란 가자미와 송어 200톤은 프랑스로 팔려나가며 양어장에서 나오는 물고기의 배설물은 인근 농가에서 비료로 쓴다. 노보노르디스크에 사는 물고기 배설물에 석회를 첨가해 90도의 열로 한 시간 동안 남아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발효 공정을 통해 물고기 배설물을 농사에 유익한 비료로 만든다(Hawken, 2004: 105-106).

대규모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대량의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고정자본의 투하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이 진행되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에서 산업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불변자본의 절약이 이윤으로 흡수되거나 경쟁에서의 우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본가는 이러한 폐기물의 절약 행위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자본가의 지불능력에 의해 재활용의 규모 및 방식-종류가 결정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의해 이윤율의 증가가 가능하거나 경쟁기업으로부터의 우위가 가능할 때만 이 일에 착수하게 된다. 즉 위에서 예를 든 칼론보르 사의 사례가 기업 일반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변자본의 절약은 사용가치에 대한 것인데 자본가들은 사용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의해 측정된 것을 주목하게 된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인간 노동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에 공짜로 표현된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자연력은 비용이 안 든다. 자본가들에게 자연 자체로 존재하는 물은 공짜다. 하지만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은 돈이 든다. 자연력을 사용하기 위한 매개체로 불변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불변자본은 자본가에게 귀속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이 공짜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폐기물의 처리 방식도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면서 한편으로 불변자본의 절약을 촉진시킨다. 하지만 대규모 생산이 자본주의적 형태에서 최초로 발전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상품을 값싸게 생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쟁은 불변자본의 절약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특유한 것으로 나타나게 만들며, 그리하여 이 절약을 자본가의 기능인 것처럼 만든다.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성격 때문에 불변자본의 절약과 따라서 이윤율 증대 수단은 노동의 생명·건강의 손상, 그의 생존조건의 악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Marx, 2004b: 98).----- 이 부분 전체 삭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가치 없는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자본의 욕망이 자본가의 냉혹한 인간성을 더욱 촉진시킨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속성은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에 포함된 노동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품에 포함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즉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하게 만든다. 끊임없는 필요노동시간의 감축 경향은 최소한의 필요노동을 가장 저렴한 경제적 환경에서 사용하려는 경향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노동자에게 투자되는 불변자본의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2006년, 한국사회를 경악에 빠뜨린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 포항 지역 건설노조 배관 분회장 박응희 씨는 건설노동자들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에 화장실이 없다면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하는 곳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 초일류 기업이라 자처하는 포스코 건설 현장에 말입니다. 작업 중에 급한 용변을 보려면 멀리 떨어진 포스코 직원들(포스코 원청에 소속된 정규직 노동자들-필자)이 일하는 건물까지 가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이젠 토요일엔 포스코 직원들이 있는 건물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일하는 곳에는 식당도 없습니다. 공사 현장마다 컨테이너가 있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어차피 작업인원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저희들을 대부분 길바닥에 그냥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갑자기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빗물에 밥을 말아먹어야 하고 첫 술 뜰 때 하얗던 쌀밥엔

다 먹어갈 때쯤이면 밥 위에 내려앉은 검은 쫄면가루가 거뭇거뭇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민주주의 연속토론회 3 ‘구속노동자 실태와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2007년 7월 4일 자료집).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는 온 몸이 시커먼 쫄면가루로 뒤범벅이 되어도 씻을 만한 목욕탕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까지도 상황이 이러한데 안전장비는 말할 것도 없다. 다음은 <<한겨레 21>>과 인터뷰한 오모씨의 증언이다.

술 안 마시고 야무지게 일하는 사람도 1년에 여기서 8개월 이상 일하기 힘들어요. 탈의실 하나 없어서 작업현장에 있는 나무에 못 하나 박아놓고 작업복 걸어놓고 퇴근해요. 저녁에 손 씻을 곳도 없고 식당은 직원들만 이용하는 곳이고 도시락 배달시켜 먹을 때는 의지할 곳 없어서, 거지도 아니고 바깥에서 빗물에 밥 말아먹고 낮에는 여기저기 쓰러져 쪽잠 자고. 안전교육 받을 때 안전화 같은 물품을 지급하고 사인을 받는데, 남이 쓰다 버린 낡은 것을 주고 작업복, 귀마개, 안전모는 주지도 않고 포스코에서 지난해 목공 노동자들의 요구로 처음으로 목이 긴 작업 신발을 썼어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포스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은 방열복도 입지 않고 작업한다. 온 몸의 땀을 빼는 열 때문에 이들은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들이 넣어놓은 방열복을 훔쳐서 입는다.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게끔 만들고 인간 이하의 작업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불변자본 절약의 진정한 실체이다. 따라서 일용직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눈에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다.

4. 환경 경영이 자본주의 내에서 갖는 한계

불변자본의 절약을 통해 이윤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본주의 기업 운영의 기본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환경 경영은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하다. 마틴 오코너(O' Connor, 1994)는 “실제로 (기업의) 비용전가와 약탈은 환경 보호와 유산 보존이라는 수사와 나란히 나아간다”고 주장한다.⁸⁾ 언뜻 보아서는 환경파괴와 환경보호의 주장이 공존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진다. 기업은 파산하기 않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잠재적 자본으로 보고 이를 걱정할 수준에서 관리한다.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측면에서만 기업은 자연환경을 관리 및 보존한다. 다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게 있어서 불변자본의 역할을 하지 않는 자연 및 환경 자원은 자본가의 관심영역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불변자본을 절약하려는 노력과 함께 환경 경영을 촉진시킨 경제외적 힘은 전 지구적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사회문제로 알려내고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온 사회운동이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운동의 압력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도출된 것이지 기업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자동적으로 커진 것은 아니다.⁹⁾ 1990년대(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온) 노동·여성·환경 등의 사회운동의 성장 과정은 사회 운영의 많은 부분을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사회에서 기존에 기업이 갖고 있던 결정권에 여러 제약을 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 변화된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며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환경 경영이다.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환경 경영과 사회적 압력에 의한 환경 경영, 이러한 이중적 모습의 환경 경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첩돼 나타난 것이다.

8) 마틴 오코너와 한스 마그누스 엔젠스베르거(H. M. Enzensberger)는 환경운동이 기업의 친환경활동을 촉구하고 감시, 감독을 하는 행위가 자본의 이윤 추구에 전면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본가를 위해 일조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9)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짐에 따라 기업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영리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인 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역할 외에도 종업원, 지역사회, 소비자 그리고 자연환경 등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영을 사회 지향적 경영이라 부른다. 사회 지향적 경영에서 기업경영의 과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충족과 기업성장과의 조화였다”(김종대·이희훈, 2003: 260). 이는 경영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나온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낮은 평지에서는 흙을 조금만 쌓아올려도 언덕으로 보이는 것처럼, 환경 경영의 필요성을 긍정적인 결과 측면에서 원인을 도출하여 강조하는 경영학자들의 이론은 그들이 보고 싶은 면만을 보여주는 것임에 불과하다. 이들의 주장은 기업의 사회적 공익 증대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에서 나온다는 것인데, 정작 이 둘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다.

1920년대 선도적 여성 카피라이터였던 헬렌 우드워드(H. Woodward)는 효과적인 카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산과 관련된 장소는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어떤 제품을 광고하게 되더라도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장은 절대 보이지 말라. …… 일하고 있는 사람도 보지 말라. ……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내부의 진실을 알고 나면 막상 제품의 판매를 결정하는 제품의 특성에 대해 아무것도 쓸 수 없기 때문이다”(Ewen, 1998 : 78). 기업 광고는 생산 공정의 소음과 지저분한 현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 축구 경기장 40개 넓이의 유통센터나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폐기되는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포스코는 섯가루로 뒤덮인 인근 주변 마을을 보여주지 않는다. ‘환경과 공존하며 푸른 세상을 만들어 가는’ GS칼텍스는 정유공장의 시커먼 기름덩어리와 오염 물질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광고를 통해서 많은 상품을 판매하면 그만이다. 그 이상의 일들은 그들이 관여하거나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환경경영은 (개별 기업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자본의 논리가 실현되는 현실을 가리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행위일 뿐이다.

기업이 친환경적 상품 개발에 뛰어들어 대부분의 경우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발현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상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선점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친환경 상품의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공해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친환경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의 특별잉여가치 획득을 위한 경쟁의 표현인 것이다. 기업의 일차적 목표인 이윤 획득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그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환경적 고려가 실질적인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만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다수의 기업들은 기존 생산방식 및 생산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최후 순간까지 안간힘을 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즉 기존의 생산방식으로는 현재의 이윤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쟁 기업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체질개선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법칙이다.

제러미 시브룩(Seabrook, 1990)은 시장을 ‘종교적 숭배집단’이라고 표현했다. 시장은 번영과 건강을 관장하는 풍작과 다산의 여신 케레스의 거처였다. 시장에 넘치는 활기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었으며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신의 관대한 태도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반면 기아와 가뭄은 부족한 믿음에 대한 신의 처벌을 뜻했다. 하지만 시장의 환경 경영은 케레스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환경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원가부담만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분다면 전적으로 사실이다. 환경규제라는 말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디젤의 유황 함유량을 유럽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할 때 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찬성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비용만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로 느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된다. 유럽 자동차업계는 현재의 환경규제가 원가부담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넘어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유럽 기업들은 환경 문제와 관련된 상황 변화가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찬성한다. 하지만 인식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이들 기업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 선두 기업이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규제는 전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한 국가의 환경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용인받기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전제되더라도 비용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 불가능할 수 있다. 환경규제 조건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주로 자금력이 받쳐주는 거대 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그것을 무기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특허권을 통해 자신의 이윤을 지적재산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개별 기업과 국가와의 결탁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환경을 통한 이윤증대는 보장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환경의 보호를 시장의 기능에 맡겼을 때 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주의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¹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제 공기도 사고파는 세상이 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공업 국가들은 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보다는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게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시장의 기능에 의존했을 때 생기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이다.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 공업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업 후진국들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진지한 대비책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합리적 선택’에 맡겨놓은 결과이다.

환경 경영은 기업 활동에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환경 경영을 위한 노력이 시장에서 인증받았다고 곧 전 지구적 환경 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동참했다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환경개선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곧 바로 전 지구적 환경 위기를 감소시킨다는 의미와는 반대로 정반대의 현실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친환경 기업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반환경 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경영은 깨끗한 환경 개선이 아닌 더 악화된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마크 새고프(Sagoff, 1990)는 ‘환경의 개선을 위해 얼마만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개별 기업을 단위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업에 대해선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분업은 제한된 상황과 영역에서만 계획·통제받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무정부적인 상황—시장의 결정—에만 맡겨져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작업장 내에서의 분업은 충분히 계획되고 통제받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보이는 계획에 대한 이 모순적인 태도는 환경 경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개별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통해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실질적으로 여러 구호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실천 여부는 의심의 여지가 크지만)¹¹⁾ 사회적으로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상반된 효과를 보인다. 개별 기업의 선행이 사회 전체에서는 악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임스 오코너(J. O' Connor) 등에 의해 정식화된 ‘자본주의의 이차 모순¹²⁾’은 개별 자본가들이 현재의 생산 조건들(물리적인 환경, 노동, 사회적 서비스와 간접자본 등)에 무임승차를 함으로써 이윤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자본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론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한계는 특정한 상황에서 시장이 개별 기업들에게 환경 경영을 강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각 기업에 대해서 절약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무정부적 경쟁 체제는 사회적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터무니없는 낭비를 초래한다. 개별 기업과 기업 일반 사이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 경영의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진정한 핵심은 개인들 각자가 그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적 이익의 전체(총계), 즉 보편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상적인 위상으로부터 각 개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이익 추구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리하여 이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보편적 긍정을 낳은 것이 아니라 보편적 부정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Marx, 1973: 156).

10) 탄소 배출권 거래의 핵심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다. CDM은 의무 감축 대상국이 비의무 감축대상국들과 식목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감축실적을 올리면 감축분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을 유엔의 승인을 받으면 비로소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11) 필자는 기업의 환경 경영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자가 아닌 이가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을 조사하는 것 자체의 현실적 어려움을 일부 실감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 경영의 구상을 화려하고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 그들이 제시한 자료들을 통해서도 환경 경영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실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었다. 환경 경영의 반영 여부를 묻는 전화 인터뷰와 이 메일 작업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고 피상적인(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라는 답변)차원에서 그쳤다. 사례 조사한 모든 기업에서 환경 경영의 현실적 반영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려하는 태도를 볼 때 이들의 환경 경영을 100% 신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당당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한 환경 경영 자료에 대한 믿음은 각 기업들의 회피 자세로 상당히 저해됐다. 경영상 비밀로 환경 경영의 실천 여부를 관계자가 아닌 이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환경 경영 실천은 생각보다 더 낮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12) 필자는 환경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코너가 제시한 ‘자본주의의 2차 모순’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마르크스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론적 논쟁을 논외로 한다면 2차 모순론이 함의하고 있는 환경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일정정도’ 고려해볼 만하다.

5. 결론

심각해져 가는 지구온난화는 자연 자원의 부족 및 환경의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상 기후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한다.¹³⁾ 이러한 인간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도 이윤 획득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려 하기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또는 재활용 시장의 개척(물론 재활용 기술의 발달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과 같은 지역적 재배치 혹은 시간의 지연을 통해 이윤을 얻고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악화된 자연 환경의 개선이 아닌 이윤을 위한 상품들(병에 담은 산소, 가스 마스크, 여러 의학 상품 및 서비스 등)이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Burkett, 2003).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자본 축적에선 자연 환경적 유용성의 희소성에 투자하는 이른바 ‘환경 펀드’ 상품으로 나타난다. 언론들은 앞 다투어 이 상품이 지구도 지키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임을 강조한다. 글로벌 펀드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환경 펀드로는 벨기에 금융기업 KBC 워터펀드, 샘(Sustainable Asset Management의 약자 SAM), 픽텟(PICTET) (이상 물 관련 펀드), 메틸런치 뉴에너지펀드, KBC 올터너티브 에너지, 우리CS자산 운용 퓨처에너지 펀드 등이 있다. 아울러 환경 펀드로 주목받는 기업으로는 프랑스의 베올리아(수질관리 업체)와 수에즈(에너지서비스 업체), 베스타스, 가메사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국내 환경 펀드 시장에서는 삼성운용, 한국운용, 한화운용, 산은운용, 대신운용, 우리CS자산 운용, 알리안츠운용, 도이치운용 등 토종과 외국계 운용회사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뛰어들어 시장 선점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환경 펀드의 투자 영역은 물,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에 주로 집중돼 있지만 최근 들어 친환경 기술 및 자원 등으로 투자 대상이 매우 다양해지는 추세다(《매일신문》, 2007년 4월 16일치). 2007년 7월 1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물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물펀드’들이 출시된 후 3개월 새 1조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대표 상품 격인 삼성투신운용의 글로벌워터펀드의 경우 9705억 원이 몰리면서 올 상반기 펀드업계 최고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서울경제》, 2007년 7월 16일치). 높아진 환경 의식으로 인한 수요와 친환경 기업들의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환경 펀드 상품이 인기를 얻는다는 삼성투신운용 해외 투자팀 담당자의 말은 상식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는 자본가들의 환경과파 행위로 사회적으로 회소해지거나 회소성이 예상되는 자연에 투자하여, 돈 벌이로 만드는 것이다. 제 살을 갉아먹는 행위인지도 모른 채, 제 살을 먹으면서 당장의 이윤의 허기짐을 달래는 것이 현재 벌이지고 있는 환경 펀드 상품의 실체이다.

기업은 건강한 자연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친환경 상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것이 현재의 자연과 기업의 관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연과 노동은 부의 필수적인 원천이다.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자연과 노동이 결합되는 방식은 생산을 위해 인간들 사이에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들에 의존한다. 경제 구조와 국가 역할의 변화—계획과 자연 자원의 민주적 사용, 이윤을 넘어서 인류의 건강한 생존과 환경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가 수반되지 않는 기업의 ‘녹색화’는 지구 생태계의 파괴를 막지 못한다(Rogers, 2006).

스미스 앤 호켄(Smith & Hawken) 사를 세워서 성공한 자본가에서 기업 환경 경영의 전도사로 변신한 폴 호켄(P. Hawken)조차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¹⁴⁾

기업을 녹색화한다고 해서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사회체제는 변화되지 않는다. 시스템을 조금 손본다고 해서 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윤 분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습지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돈조반니의 새 공원에 돈을 기부한다고 물이 맑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재활용지에 연례보고서를 찍어낸다고 해서 구원받지도 못할 것이다(Hawken, 2004: 29).

13) 2007년 7월 하반기, 30도가 넘는 폭염으로 노숙자가 아스팔트 위에서 자다 목숨을 잃었고 노인들은 더위로 쓰러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심한 탈수와 함께 마비 증세를 보였다.

14) 그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영방식에서 머무는 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조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갈망하는 녹색 자본주의(natural capitalism)는 공중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은 망상이다. 지속가능한 기업경영방식이 자본주의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맹점이기는 하지만 걸치레에 머무는 현재 기업 환경 경영의 사례에 대한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한 점에서 그의 책은 유의미하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환경 경영이 자본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환경 보전의 효과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자본의 논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 경영은 이 목적을 감당할 수 없다. 환경 경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축적을 목적으로 삼는 기업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불길한 망령은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찾아오며 상상만 하던 비극은 너무나도 쉽게 적나라한 현실이 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레이첼 카슨(Carson, 2002)의 충고처럼 전 지구적 환경 위기는 오늘날 적나라한 현실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우리 앞에 서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 활동에서의 환경 경영이 아닌 인류 전체가 직면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환경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참고문헌

- 김동수. 2005. 『자본의 두 얼굴 : 이진경의 마르크스 재해석에 대한 반론』. 한얼미디어.
- 김종대. 1999.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 그린매너지먼트」. 《산업과 경영》. 충북대경영연구소.
- 김종대·이의훈. 「환경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35호.
- 민주주의 연속토론회 3. 『구속노동자 실태와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2007년 7월 4일 자료집.
- 박창길. 「환경 경영현상의 비판적 고찰」. 《연세경영연구》, 제41권 제1호.
- 이병욱·황금주·김남규. 2005. 『환경 경영』. 에코 리브르.
- 정성진.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맞붙》, 41호.
- 정현배. 1995. 『환경 경영전략』. 규장각.
- 조명래. 2006.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환경과 생명.
- 한상훈. 1995.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 ISO 14000 규격화와 기업의 대응』. 동화기술.
- 황병문·김오우·임재화. 「환경 경영의 현상과 전망에 대한 고찰」. 《산업경영연구》, 10호. 《서울경제》, 2007년 7월 16일.
《매일신문》, 2007년 4월 16일.
《포스코신문》, 2007년 5월 22일.
《한겨레 21》, 2006년 8월 3일.
- Braverman, H. 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Twentieth Century*. 이한주·강남훈 옮김. 1991. 『노동과 독점자본』. 까치.
- Burkett, P. “Capitalism, Nature and the Class Struggle”. Saad-Filho, A. 2003. *Anti-Capitalism: A Marxist Introduction*. Pluto Press.
- Carson, R. 1962. *Silent Spring*. 김은령 옮김. 2002. 『침묵의 봄』. 에코 리브르.
- Ewen, S. 1976. *Captains of Consciousness: Advertising and the Social Roots of the Consumer Culture*. 최현철 옮김. 1998. 『광고와 대중소비문화』. 나남출판사.
- Foster, J., B. 2002. *Ecology Against Capitalism*. 추선영 옮김. 2007.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책갈피.
- Fox, W. 1990. *Toward a Transpersonal Ecology: Developing New Foundations for Environmentalism*. Shambhala.
- Grundman, R. 1991. *Marxism and Ecology*. 박만준·박준건 옮김. 1994.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동녘.
- Hawken, P. 1993. *The Ecology of Commerce*. 진준형 옮김. 2004. 『비즈니스 생태학』. 에코 리브르.
- Marx, K. 1818.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 Nicolaus, M(trans). 1973. *Grundrisse*. Penguin.
- << _____ . 1986. *Capital* Vol.1. 김수행 옮김. 2004a. 『자본론』 1 상. 비봉출판사.---전체삭제!!>>
- _____ . 1986. *Capital* Vol.3. 김수행 옮김. 2004. 『자본론』 3 상. 비봉출판사.
- Myers, M. 1999. *The Gaian Corporation*. 정지인 옮김. 2000. 『가이아의 기업』. 시대의창.
- O' Connor, M. 1994. “On the Misadventures of Capitalist Nature”. O' Connor, M(ed). *Is Capitalism Sustainable?* Guilford Press.
- Rogers, H. “Garbage capitalism's green commerce”. Panitch, L. & Leys, C(ed). *Socialist Register 2007-Coming to terms with nature*. 2006. Merlin Press.
- Sagoff, M. 1990. *The Economy of the Earth: Philosophy, Law, and the Enviro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brook, J. 1990. *The Myth of the Market*. Green Book.
- Shrivastava, P. 1987. *Greening Business: Profiting The Corporation and The Environment*. 이장훈 옮김. 1998. 『그린비즈니스 환경과 차세대』. 자연사랑.
- Vogel, D. 2005. *The Market Virtue*. 김민주·김선희 옮김. 2006.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 거름.

녹색, 전선을 넘어서

-그린자본주의 시대의 에코·생명 담론

주요섭(대화문화아카데미 부설 바람과물연구소 연구위원)

戰線의 닷에 갇힌 녹색¹⁵⁾

녹색공화국이다. 청와대의 푸른 기와에서부터 기업과 행정기관의 캠페인 광고까지 온통 녹색이다. 전국적인 자전거 축전이 열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제21>의 ‘지속가능성’을 대체해 <Green Start Network>의 ‘성장가능성’을 발진시켰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녹색 전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랜 녹색/생태/생명 담론 및 행동의 주인공들은 보이지 않는다. 공화국의 백성이 아니라 말인가? 근본주의와 진보주의의 녹색은 2009년 봄 ‘지금 여기’ 없다. 어찌된 일일까? 참여정부와 진보·개혁에 얽여 더불어 파산한 것일까? 아니면 MB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녹색의 과제가 후순위로 밀려서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MB정부의 정치적 탄압 때문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원인은 항상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녹색은 지금 진지(陣地) 안에서 칩거 중이다. 숲속과 하천 그리고 저자거리에 있어야 할 녹색이 反MB 전선의 한 모퉁이에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있다. 고립된 전선에서 움작달작 못하고 있다. 녹색 진보를 자부해온 사회운동은 녹색성장을 타고 갈 수도 없고 비자본주의적 녹색 유토피아를 선언할 수도 없다. 녹색성장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자니 反MB 전선이 무너질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MB가 그것을 전유할 것 같다. 사실은 이미 MB의 것이 되었지만.

전선(戰線)은 2차원적이다. 근본적으로 ‘너와 나’의 이분법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진보도 녹색도 그 평면도의 프레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4차원은 고사하고 3차원의 지형도마저 보지 못하는 있는 건 아닐까? 10년의 관성 때문에, 그리고 혹시 지난해 봄 휘황한 촛불의 함성에 눈이 어두워져 우리의 처지와 세상의 전모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른바 87년 프레임, 즉 민주와 반민주, 진보와 보수, 애국과 매국, 보존과 개발 이라는 이분법의 프레임에 녹색도 진보와 함께 갇혀 있는 것 아닐까.

좌파의 반대편 우파는 逆전선 전략으로 그 반대편 진보좌파를 무너뜨렸다. 무지막지한 좌우의 이분법으로 전선을 확실히 한 뒤, 좌파의 딱지를 부쳐 좌파를 고립시키고 좌파를 무력화시켰다. 여기에 더해 역전선을 넘어 新전선 전략으로 결정타를 날린다. ‘진보 vs 보수’라는 진보의 프레임을 ‘선진 vs 후진’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른바 선진화담론 그것이다. 줄지에 아니 시나브로 진보·녹색·개혁·시민운동은 모두 낡고 늙은 ‘후진’세력이 되어버렸다. 선진과 후진, 민초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전선은 그렇다 하고, 反MB 전선은 더욱 딱하게 되었다. 87년체제의 결과물인 선거 민주주의에 의해 국민들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권력을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인정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명박정부의 일방적 행동은 ‘인정’의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강부자 계급정치와 삼질경제도 용납되기 어려운 형편에서, 촛불에 데어 유아 수준의 자기보호본능으로 점철하고 있으니 말이다. MB를 어찌할 것인가?

15) 필자는 지금껏 글을 쓸 때에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녹색’ 대신 ‘초록’으로 쓰려고 노력해왔다. 예컨대 독일녹색당도 독일초록당이다. 그런데 이 글에선 녹색으로 쓴다. 필자의 입장에서 ‘녹색성장’도 ‘초록성장’으로 표현해야 옳다고 보지만 원고의 주제 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간 ‘초록’으로 표기했던 이유만 간단히 적는다. 영어로는 녹색도 초록도 모두 Green이다. 그런데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더 이상 ‘녹색’이 없다. 2003년 정부가 기존의 일본식 색깔 이름 체계를 바꾸면서 ‘녹색’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물론 관용적 표현으로는 녹색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그 색깔 이름을 모른다면... 더 중요한 것은 ‘초록(草綠, green grass)’이 녹색이 지닌 환경이라는 표피적 이미지를 넘어 생명, 평화, 풀뿌리 등의 가치를 보다 깊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색깔 이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시민/환경운동에게는 분한(?) 일이지만, 이미 녹색은 선진화의 색깔, 경제 살리기의 상징이 되었다. 청계천식 토목조경의 청사진이 그럴듯하게 펼쳐지고 지방의 4대강 건설 현장 곳곳 함바집이 시끌벅적 해지면 ‘가짜녹색’과 ‘삼질경제’라는 비판도 그 소음에 묻혀버릴지 모른다.

좋은 이야기는 전부 진보의 것이 되었다는 조선일보의 통탄 탓인지 이제 보수우파는 ‘진보’마저도 내 놓으라고 하는 판이지만, 최소한 녹색은 이미 물 건너간 셈이다. 적어도 현재의 구도에선 진보·녹색은 선진화 담론 및 세력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초록(草綠)은 동색이라. 진짜녹색과 가짜녹색, 헌딜과 뉴딜, 성장과 녹색의 형용 모순을 조롱하는 사이 녹색은 MB의 것이 되었다.

녹색혁명 녹색성장 에코자본주의

사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산업으로서의 ‘녹색’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박정희 근대화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가 이름도 훌륭한(?)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었다. 농협의 녹색 로고도 여전 하거니와 쌀 포대의 녹색 도안도 눈에 선하다. 쌀은 햇빛과 공기와 물과 사람의 손길이 묘합된 자연의 연기법으로 영근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쌀은 다수확품종(심지어는 GMO까지)을 고리로 화학 비료와 대규모 관개와 농약과 차가운 기계 작업이 집적된 ‘산업’의 연기법으로 생산된다. 녹색혁명은 남 반구의 자립적·생태적 자연농업을 황폐화시키고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초국가 식품·화학기업에 종속시켰다. 그러나 ‘통일벼’의 보급으로 상징되듯 녹색혁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 동남아시아 녹색혁명의 기지 역할을 했던 필리핀이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식량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면 한국은 적어도 주곡인 쌀에 관한한 자급을 이룩했다. 성공 신화가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바로 이점이 문제적이다.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박정희의 녹색혁명과 닮았다. 21세기의 그린이코노미와 20세기 후반의 농업혁명은 가히 에코자본주의라고 할 정도로 자본의 변신과 전유 전략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수사법이 같다. ‘녹색’ 혁명과 ‘녹색’ 성장. 다음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이 주도하고 초국적 대기업이 주도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식량·화학에서 IT·에너지기업으로 살짝 바뀌긴 했지만, 또한 당연하게도 자본집약적 테크날러지가 녹색 혁명과 성장을 뒷받침된다. 그리고 역시 최종 판매처는 지구의 남쪽 저개발국가들이다. 미국식 그린이코노미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녹색코드]의 저자는 3월 한국을 방문해 “석유와 석탄 실컷 쓰며 성장한 미국이 앞으로 4~5년간 녹색기술을 집중 개발해 개도국에 비싼 값에 팔려 할 것”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녹색성장은 녹색혁명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를 넘어서 치밀한 자본의 전략이며 탁월한(?) 정치기획이다. 녹색혁명은 빈곤문제와 식량문제를 해결하여 안민(安民)으로 민심을 얻었거니와, 녹색성장은 이른바 진보의 녹색 이니셔티브를 일거에 무너뜨리면서 ‘선진화’ 담론을 완성시켰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론이 성장주의의 한계 속에서도 그나마 존재의 의미가 되었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녹색성장은 거세했다. 계급적 목표를 분명히 한 셈이다. 대신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신성장동력이라는 환상으로 이를 대체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론은 이미 생태주의적 녹색담론을 무력화시켰을 뿐 아니라 분명 경제적 성공 가능성도 있다. 아니 실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경제규모로는 ‘Great 13th’, 최소한 ‘G20’에 들어가는 한국경제는 이미 ‘80대 20’이라는 지구촌 양극화의 구도 속에서 선진 20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본주의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축인 미국과 일본과 지정학적 혈맹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제국의 관점에서선 변방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착실한 ‘범생이’로서 좀 더 키워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존재도 위협요인이기 보다는 국제정치역학 속에서 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기업국가·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이명박정부는 산업화과정에서 세계 자본주의 분업체제에서 차지했던 포지션과 비슷하게 미일 ‘녹색기술동맹’의 파트너 혹은 서브 동맹이 되어 녹색기술 권력을 분점하는 ‘그린코드’ 카르텔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적자생존의 인재강국(?)은 미-일 동맹의 이끄는 녹색성장 열차에 올라탈 수도 있다. 이 도저한 실용주의(?)(더욱이 한국경제엔 지금은 유보되어 있지만 북한 및 몽골·연해주·중앙아시아·시베리

아로 이어지는 ‘통일·대륙경제’라는 또 하나의 옵션이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카드다.)

요컨대 한국에서 산업으로서의 녹색은 이미 현실이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중심부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체제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꾸로 대한민국 일국 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 선택지는 없으며 근본적인 변화는 세계체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한국의 경제만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의 운명도 미국과 중국의 거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녹색성장’, 자본의 관점에서 녹색과 성장은 양립 가능하다. 기후변화 비용을 투자로 전환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녹색성장시대의 도래]라는 책을 통해 소개하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올해 초 출간한 [녹색성장의 길]에서는 성장과 환경이 양립하는 녹색성장 전략을 이렇게 그려낸다.

먼저 <녹색기술>을 개발한다. <녹색기술>은 한편으로 <저탄소화>를 가능케 하고 <환경보호>를 이루게 된다. 또한 <녹색기술>은 다른 한편으로 <녹색산업화>를 추동하게 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개의 과정이 모아진 것이 바로 <녹색성장>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순환고리>가 형성되게 된다. 심플하다. ‘기술’에서 시작되어 ‘성장’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그 전제는 자본이다. 기술 개발은 대규모 자본 투자로 가능하며, 성장의 과실은 자본축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녹색혁명을 통해 에코/생명을 전유했던 세계자본주의는 이제 마지막 남은 공유지, 즉 공기와 물, 기후마저도 상품화·자본화하려 한다. ‘녹색성장론’은 ‘녹색혁명’처럼 생태계·생명세계를 전유하려 한다. 생명에 대한 전유는 자본축적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준다. 후기 자본주의가 소비를 포섭, 새로운 자본축적의 지평을 열었다 21세기 에코자본주의는 녹색을 포획하여 성장동력으로 삼아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 모델로써 ‘녹색자본주의’ 혹은 ‘에코자본주의’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 그쳤던 기왕의 ‘녹색공동체주의’를 단숨에 넘어섰다. 이것이 실상이다.

녹색성장론은 녹색 보전주의의 네거티브 논리의 약점을 너무 쉽게 깨버린다. 녹색성장론은 사실 생태 ‘근대화론’이나 지속가능·발전론의 새로운 버전, 아니 노골적인 버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선진화담론에 그러하듯이, 공동체주의가 근대화론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듯이, 정치적 녹색주의와 녹색 근본주의는 무기력하게 에코자본주의에 물려설 수밖에 없다.

물론 녹색자본주의는 지구적 불평등을 가속시킬 것이다. 녹색기술에 대한 제국의 독점으로 지구적 차원의 ‘삶/생명의 불평등’은 불가역적 상황이 될 것이다. ‘녹색기술’은 IT신화가 증명하듯이 일부 기술지배국가의 성장을 보장하기는 하나 지구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거시적으로 보면 농업사회-산업사회-정보사회를 거치면서 지식과 부의 독점과 함께 지구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가속되었다. 격차는 전면화되어 사회경제적 격차를 물론이거니와, 정신문화, 생명, 생체,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울 수 없는 반상(班常)의 차별을 구조화·내면화할 것이다.

차원변화와 전환의 기획

지구적 불평등.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말은 선진 제국의 상대적 풍요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홍수나 대기근과 기후변화나 괴질의 창궐과 같은 지구적으로 끔찍한 ‘평등한 재앙’이 오지만 않는다면, 제국의 한 귀퉁이 Great 20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나름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은 이제 숙명적으로 지구자본주의체제와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사실은 거꾸로 세상은, 사람의 마음과 사회의 구조는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절규라 하더라도 자신의 일이 아니면 들리지 않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겁다. 지구적 금융위기,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만약 중국의 대지진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다면,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와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녹색의 전략은 숙고 혹은 재고되어야 한다.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

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국자본주의도 일국혁명도 없다. 국민경제 수준의 자립경제는 불가능하다. 경제구조를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삼성과 현대에 의존적인 수출경제의 틀을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은 현재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한반도 남쪽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5천만 민초들의 삶/생명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21세 초엽 대한민국에서의 사회경제적 밑그림은 2차원의 전선도(戰線圖)를 통해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전취가 아니라 차원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것은 ‘전복’이 아니라 ‘전환’이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1980년 서부 독일에서 창당된 녹색당의 의미는 ‘차원변화’에 있었다. 다양한 명암과 빛깔의 레드(사회주의)와 블랙(아나키즘), 그리고 블루(우파 환경보전주의)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자신을 그린이라고 정의했다. 분홍도 회색도 자주도 보라도 아닌 녹색(초록)이었다. 녹색은 좌와 우의 전선도를 넘어서 분홍이 아니라 초록으로 전환 혹은 차원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3차원이나 4차원에서 보면 좌우의 전선은 부질없는 일이다. 수많은 전선과 공중전과 화이트/블랙 홀 중 하나일 뿐이다.

4차원으로 보면 싸움의 양상보다 민초들의 삶/생명 자체가 소중하다.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동시에 존재한다. 현재의 삶을 지혜롭게 전환하고 ‘다른 세계’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이중 전략, 아니 다차원적 삶, 다중전략이다. 2009년 봄 대한민국의 녹색은 교착된 전선에서 빠져나와 MB의 녹색을 타고, MB의 녹색성장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전환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선(perspective)’을 바꿔야 한다.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분명 우리의 먼 시선은 ‘자립과 연대의 생태적 자치공동체’에 향해 있을 것이다. 어소시에이션과 코뮌에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대안적인 공간을 교직하는 것이다.

전환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면, 구조화된 단일전선은 해체되어야 한다. 오히려 전선은 4차원적으로 여기 저기, 이때 저때, 안팎에 다른 모습으로 확산(擴散)되고 편재(遍在)되어야 한다. 어느 순간 전선이 하나로 모아질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반MB 투쟁은 할 수 있으나 반MB전선에 통합될 수는 없다. 성장 vs 反성장의 전투를 벌일 수는 있다. 하지만, 反성장 전선으로 대동단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장에 대해 ‘성숙’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녹색을 타고 가되,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공론을 만들어 내는 것. 이미 저성장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무성한 잎사귀 떨구고 오롯이 열매 맺는 성숙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녹색은 반딧불이가 아니라 가로등처럼 이웃이 된다.

그리고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 내 마음 한 켠에 희망을 담아 놓듯, 우리의 삶 여기 저기에 다른 세계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탈상품화와 비자본주의적 관계망, 비성장과 순환의 경제학, 영성문화적 삶과 생태적 삶과 사회적 삶이 조화로운 공동체, ‘호혜의 공동체’를 지금 여기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때 녹색은 반딧불이나 혹은 등대처럼 사람들 마음 속에 희망이 되고 ‘촛불광장’처럼 열망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것이다.

세계관과 생활양식과 체제의 전일적 전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 다른 삶을 여기서 실하는 다중 전략. 이것이 생태적 전환, 녹색의 기획 아닐까. “money based path”에서 “life based path”로의 전환.(www.gaia.org)

에코=생명, 세 가지 에콜로지와 생명 담론

차원변화로 열린 세상은 새롭게 정의되고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새로운 담론 즉 스토리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린(녹색)은 사실 한국에 건너오면서 ‘탱자’가 되었다. 서유럽에서 그린은 산업사회와 근대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소비에트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환의 상징이었다. 68혁명이라는 공동의 사회·문화적 자산 위에, 신사회운동과 다양한 대안운동의 토대위에서 질적인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온 그린은 그저 생태, 환경, 혹은 (좁은 의미의) 웰빙이었을 뿐이다.

서유럽에서 에코(Eco, 오이코스)는 삶/생명의 터전이며 자궁이며 우주(宇宙)였지만, 근대적 번역어 에콜로지=생태학은 그저 환경이었을 뿐이다. 인간이 빠진 생태, 조건으로서의 환경(環境, environment)이

었다. 그나마 가타리가 [세 가지 생태학]을 통해, 에콜로지는 환경생태학 뿐 아니라, 정신생태학과 사회생태학을 포괄하는 ‘전체’라고 밝힘으로써 오이코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가지 한국에서는 [녹색평론]이 깃발이 아닌 삶/생명의 전일성, 옛말로 하자면 총체성을 담보해냈기 때문에 녹색·생태는 오이코스의 함의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녹색평론이 아니었으면 한국의 녹색은 수박처럼 냉장고 밖에 나오자마자 금새 흐물흐물 썩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은 불필요하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인간은 이미 땅 위, 하늘 아래 서있는 큰 생명세계에 내포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즉 천지인(天地人) 생명의 세계관은 처음부터 전일적이었으므로 분열과 재통합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녹색은 청적황백흑(靑赤黃白黑) 오방색의 청(靑)에 불과하다. 오히려 황이 땅의 색깔이며 중심인 셈.

그러므로 에코는 곧 생명세계. 에코=생명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에코-피스(eco-peace)는 생명평화(生命平和). 에콜로지는 여전히 생태학이라 하더라도 에코는 이코노미(economy)의 에코를 포함하는 생명세계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천지인 삼재를 아울러 기(氣)/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말이다.

요컨대 차원변화하는 녹색은 ‘에코=생명’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녹색 그 자체로 정신적(天), 환경적(地), 사회적(人) 공공성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듯 녹색·환경 담론은 에코/생명 담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2차원적 전선을 넘어서 민초들의 마음을 울리는 촛불에서 보았던 것처럼 휴화산의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는 내면의 열망들, 생명의 조화와 아름다움, 공동체와 자기실현의 공명현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북고형의 공동체주의와 보전주의를 넘어서는 에코/생명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중국의 공산당이 제시한 ‘화해(和譜)사회’가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실제 현실과는 관계가 없지만, 공부의 과제가 된다. 최근 일부 유럽의 진보학자들이 중국의 경제를 보고 ‘호혜적 시장경제’라고 했던 것도 주목할 일이다. 필자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에코/생명의 전일성(全一性)과 온 생명적 혹은 우주적 자기실현이라는 전망이 있어야만 절제와 절약, 그리고 작은 삶 등 네거티브 메시지를 넘어서 아름다운 자기실현, 우주적 합일과 생명의 열망을 포함한 포지티브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저울과 거울, 그리고 피리

최근 플라니가 뜨고 있다고 한다. 삶/생명의 직접성(플라니식으로 말하면 실제성)에 대한 주목이기도 하고 호혜적 관계망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다. 사회-시장-국가라는 현대적 삼재(三才)를 생각할 수도 있다. 도식화시켜서 표현하면 이런 정도. 사회=호혜=공동체주의=박애, 시장=교환=자본주의=자유, 국가=재분배=사회주의=평등.

녹색의 경제학은 어디쯤 있을까. 자립과 연대의 경제학이라고나 할까. 시장과 국가, 사이 혹은 너머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시장-국가의 삼원구조 속에서는 사회(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전망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리다. 그 작동원리는 호혜다.

호혜는 자연과의 호혜이기도 하고 공동체 내부의 호혜이기도 하다. 그것은 근대적 기획의 완성일지도 모른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 자유와 평등, 박애. 자유와 평등 사이 박애로 균형을 잡아야 할 일이 아닐까. 그것은 완성이며 새로운 차원변화의 열쇠이다. 박애가 필요하다. 사람에게 대한 자연에 대한 박애가 곧 호혜 혹은 사랑이다.

녹색은 호혜다 사랑이다. 진보는 평등으로, 재분배로, 국가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화된 세계관이다. 386들이 너무 일찍 투항한 것도 물화된 세계관 때문이 아닐까. 산업사회가 그러하듯이, 인간관이 영성문화적 삶, 생태적 삶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닐까.

최근 만난 어느 불교 사회운동가의 말대로 ‘저울’과 ‘거울’이 필요하다. 서유럽에서 법의 여신은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저울은 형평(衡平)을 상징하고 칼은 권력 혹은 형평의 수단을 상징한다. 거울은 무엇일까. 반성 혹은 성찰이다. 필자는 ‘저울’과 ‘피리’를 떠올린다. 저울과 피리는 평화, 주고 주고. 평은

참고자료

천칭저울, 화의 어원은 원래 衡(피리 약)이라고 한 데서 영감을 얻었다. 균형과 조화, 혹은 균형과 아름다운 하모니 곧 미학(美學)인 셈이다. 하늘-땅-사람, 사회-시장-국가라는 삼정립(三鼎立)의 역동하는 균형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세 가지 장단기 녹색의 과제.

‘호혜’가 시장과 국가의 균형추가 되는 사회. 호혜(박애)에 중심이 되는 자유와 평등의 공화국. 혹은 호혜에 기반한 계획적(사회적) 시장경제.

‘공존’. 시장과 계획,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공존. 그리고 비자본주의의 차원변화=전자본주의×후자본주의×반자본주의.

‘연착륙(soft landing)’.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위기, 마이너스 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착륙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의존경제가 한국의 숙명이라면 줄일 수는 있어도 무역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내수경제와 통일경제를 고리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화국의 구성원들, 민초들의 삶/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서서히, 혹은 급진적 전환을 위하여.